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연구책임자: 정성윤(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김정은 정권 5년 통치전략과 정책 실태

KINU 연구총서 17-20

---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자	정성운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02-514-5043)
인쇄처	㈜세일포커스(02-2275-6894)
I S B N	978-89-8479-900-4 93340 북핵 문제[北核問題], 북한 외교 정책[北韓外交政策] 349.11-KDC6 / 327.5193-DDC23 CIP2018002525
가격	6,500원

---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 례

요 약 .....	9
<b>I. 서론 .....</b>	<b>19</b>
1. 연구 목적 및 연구 필요성 .....	21
2. 연구 배경: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	22
<b>II. 적용 이론: 강압전략 .....</b>	<b>31</b>
1. 강압의 개념과 분류 .....	33
2. 강압메커니즘 .....	36
3. 강압전략의 유형과 성패 요인 .....	42
<b>III.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b>	<b>47</b>
1. 핵능력 중심의 안보역량 .....	49
2. 핵전략 특징 .....	71
3. 핵전략 메커니즘 .....	76
<b>IV. 김정은 정권의 대외·대남 전략 .....</b>	<b>85</b>
1. 전략 구상의 결정요인 .....	87
2. 대외전략과 북미관계 .....	92
3.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	103
<b>V. 결론 .....</b>	<b>113</b>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참고문헌 ..... 12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25

## 표 차례

표 III-1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 .....	51
표 III-2	북한 핵실험 탐지결과 .....	59
표 III-3	김정은 집권 시기 ICBM 관련 시험 경과 .....	63
표 III-4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구축 단계 .....	70
표 IV-1	김정은 정권 핵강압전략 구상의 상수 .....	88



# 그림 차례

그림 II-1 강압전략의 분류 .....	34
그림 III-1 북한의 3개 미사일 벨트 .....	68
그림 IV-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일지 .....	111



## 요 약

안보전략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한다. 북한 안보전략의 핵심이자 요체는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세 가지이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중심의 안보전략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중심 안보전략이 북한의 대외 및 대남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전략에 대응해 한국이 어떠한 방향의 대외 및 대북 전략을 설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력한 적용 이론으로 ‘강압전략(coercive strategy)’을 원용한다. 즉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을 ‘강압전략’의 전형으로 파악하고,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대외관계뿐 아니라 대남관계에서도 핵무기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기대효용에 의지해 강경한 전략과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왜 강압전략에 기초해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과 대외·대남 전략을 분석해야만 하는가? 김정은 5년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은 핵능력에 대한 과장과 핵억지에 대한 맹신을 바탕으로 공세적 대외전략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적극적 대외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강압외교로 특징되는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을 자세히 구명해야지만 북한의 전략적 의도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강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대외전략 수립 시 한국 정부의 과소 및 과잉 대응을 지양할 수 있는 전략적 해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적용 이론으로써의 강압전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은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수단들을 활용해 한국, 미국 등을 ‘강압(coercion)’하는 것이다. 강압은 주로

## 요 약

군사적 위협을 통해 상대의 행동방식, 의지 그리고 정책결정 내용을 변경 시키려는 행동 및 전략을 말한다. 통상 강압전략의 강압은 군사적 강압을 지칭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사적 위협에 더해 정치·외교·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위협 또한 광의의 강압으로 볼 수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강압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차원의 특징들이 있다. 첫째, 강압은 상대측의 정책결정에 특정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즉 강압이란 무력 사용이 강압대상국의 전략 결정과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둘째, 강압이 군사력 사용을 항상 고려하지만 그 궁극적 목적이 강압대상국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강압전략에서는 강압대상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 위협이 신뢰성을 가질 정도까지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경우를 우선시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강압은 위협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단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하지만 강압대상국과의 정치 외교적 타협이 전적으로 거부당하는 경우, 강압국과 강압대상국 간 갈등은 종종 물리적 충돌을 통해 해결되기도 한다.

통상 강압전략에서 강압은 ‘강제(compellence)’와 ‘억지(deterrence)’로 구분되며, 강제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와 ‘공갈(blackmail)’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강압전략을 구상하는 국가는 강압을 위한 능력 보유뿐 아니라 강압메커니즘의 효율적 구성에도 노력한다. 이는 강압을 통한 위협이나 고통을 통해 강압대상국이 굴복 혹은 순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의미한다. 강압메커니즘은 너무나 다양하며 모든 메커니즘은 각각 일정 정도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북한의 강압전략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강압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대표적 강압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정치적 권력기반의 잠식

## 요 약

(power base erosion): 정권과 엘리트 그룹 간의 관계 위협, 2)사회동요(Unrest): 대중의 불만 유도, 3)관계 단절(Decapitation): 권력 지도층의 신변 위협, 4)국가 능력 약화(Weakening): 국가의 총체적 능력 약화, 5)거부(Denial): 정치적·군사적 승리의 방해, 6)간접 강압(Second-Order Coercion).

효과적인 강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물리적 강압능력이 요구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강압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구축하고자 하는 핵무력은 핵물질 생산시설 확보, 핵무기 완성, 실전 운용능력 확보, 핵전략 수립으로 구성된다. 핵무기 고도화는 이 중 핵탄두 및 미사일 능력의 기술적 완성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핵무력 구축을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핵기술 고도화는 이르면 2018년경, 핵전력은 2020년경을 전후한 시기에 구축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핵무력 구축은 다음과 같이 총 5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2012년~2013년)에서는 법적·제도적 준비 및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핵 보유국’ 헌법 명문화(2012년 5월)와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 발표(2013년 4월)이다. 2단계(2013년~2014년)는 핵무기 고도화 시작 단계이며, 주요 내용은 HEU(Highly Enriched Uranium, 고농축우라늄) 중심 핵물질 보유전략 전환과 단거리 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 성능 개선 집중이다. 3단계(2015년~2016년)는 핵무기 고도화 질적 발전 단계이며, 주요 내용은 표준형 원자탄(핵분열탄) 기술력 확보(핵기술력 1세대), 2세대 수소탄(핵융합기술) 기초 기술력 확보, 준거리 미사일(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MRBM) 실전능력 확보 등이다. 4단계(2017년~2018년)는 핵

## 요 약

무기 고도화 완성 단계이며, 주요내용은 수소탄(증폭핵분열탄) 기술력 확보(핵기술력 2세대)와 중·장거리 미사일(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IR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실전능력 확보 및 미사일 다종화 구축이다. 마지막 5단계(2019년~미정)는 핵무력 구축 완성 단계이며, 주요 추진 과업은 핵무기 생산 체계 구축 및 대량 생산 개시 그리고 핵무기 실전배치 완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은 이상과 같은 핵무력을 실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전략 즉 핵태세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김정일 시기의 핵태세는 핵무기의 정치외교적 효용을 강조하는 ‘촉매형’에 가까웠다. 당시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에 대한 최소억지력을 목표로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이해를 지렛대 삼아 핵 개발을 활용해 중국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집권 이후 북한 핵태세는 기존의 촉매형 태세 가운데 가장 공세적인 형태인 ‘비대칭확진’ 유형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현재 객관적인 핵전력과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핵태세는 ‘확증보복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중심 안보전략은 강압전략의 전형이다. 강압의 의미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의 안보전략은 강압적 전략이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 위협과 핵무력을 수단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 의지, 결심,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통상 협의의 수준에서 강압전략은 군사적 강압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은 전임 김정일 시절과 달리 자신들의 핵무력과 군사적 도발을 통해 비핵화 타협을 거부해 왔다. 즉, 핵 중심의 군사적 효용으로 상대와의 영합적 계

## 요 약

임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사안보적 강압의 전형이다. 넓은 의미에서 강압은 경제·정치외교적 압박을 포괄한다. 김정은 정권은 개성공단 협력 사업의 파탄을 초래함으로써 한국을 강압했다. 즉 개성공단이라는 경제협력 수단을 활용해 핵 보유라는 안보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중심의 공세적 안보전략으로 정치외교적 목적 또한 달성하려 하고 있다. 핵 보유국 지위 확보 주장이 대표적이다. 자신들이 핵무력을 달성하면 핵 지위국은 자연히 확보될 것이며, 이를 통해 체제와 정권의 생존 환경을 정치외교적으로 우세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다. 강압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은 강압전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강압전략의 주요 구성요소인 강제(compellence)와 억지(deterrence)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강제전략 중 김정은 정권은 강압외교보다는 공갈(blackmail)에 경도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이 비위협적인 설득과 협상 등 긍정적 유인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방어적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 5년 동안 북한은 위기 관리보다는 위기 고조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반면 최근 김정은 정권이 공격적 의도를 숨기지 않고 공세적 위협을 가하나, 실제 극단의 군사적 행동까지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갈’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이 흔히 언급하는 서울 및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2017년 7월 광 인근을 포위하는 미사일 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정세 형성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점도 강제전략의 입장에서 설명 가능하다.

## 요 약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중심의 안보전략이 비단 강제와 공갈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태는 전술적 위협이나 행위 차원에서 자주 구사된다. 전략적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 안보전략의 강압적 특징은 ‘억지’에 집중되어 있다. 즉 “핵무력 위협을 통해 미국 등 국가의 의지에 영향을 주어 정권 및 체제의 생존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미국이 압도적 핵 우위를 바탕으로 실제 군사적 행위를 강행한다면 쉽게 좌절된다. 이러한 취약성 차원에서 북한의 안보전략은 억지적 속성을 내포한다. 아울러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지속하고 설사 그들이 지향하는 핵무력을 완성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강압정책이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나아가 한미동맹이 파열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도 억지전략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우위의 강압전략은 대외관계에도 고스란히 투사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은 핵무기와 북미관계가 근간이자 전부이다.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핵무력을 완성해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는 대외환경과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극복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미국의 방해를 극복하는 것이며, 최종적 과업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전략을 전환시켜 미국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이 처한 외교안보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핵 지위국 확보가 이러한 전략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 맹신하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그 어떠한 흥정에도 교환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나 국제적 보장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확실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



## 요 약

정권은 안보적 측면에서 ‘이중잠금 장치’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즉 핵무력 강화를 통한 핵 지위국 확보라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장치(crucial key)와 북미 평화협정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정치외교적 부속·보조 장치(subsidiary key)를 통해 대외관계 및 정세를 확실히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가 없는 후자는 부족하며 전자를 획득하면 후자는 저절로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보너스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중심의 강압전략은 대남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두 시기로 대별된다. 우선 2015년 하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 북한은 협력과 도발의 소위 화전양면의 전략적 관점에서 대남관계를 규정하려 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전략과 정책은 2016년을 기점으로 질적으로 전환된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통한 전략적 지위 고양, 그리고 국가 생존 환경의 주체적 구축에 남한 정부의 도움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큰 방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즉 그들의 최우선적 국가 과업을 추진하고 완성하는 데 남한의 전략적 가치는 그리 높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핵무기 고도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 제재의 여파를 상쇄하거나 우회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남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국면에서 탈피해 북한의 요구와 필요에 응할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김정은 정권은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큰 방해도 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대북제재와 압박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는 항상 이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핵전력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규정하고자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북한의 강압적 대남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역(逆)강압전략을 포함해 우리 정부의 우세를 유지할 수

## 요 약

있는 적극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핵 억지에 대한 군사적 도전이 제기될 경우 한국이 강제(compellence)로 전환해야만 하는 시기와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도 부가적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과장으로 남북 대화 과정에서 협상력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북 교섭능력의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고려해야만 하는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주제어:** 핵무력, 북핵 고도화, 핵전략, 강압전략, 북미관계, 남북관계

## Abstract

### Kim Jong Un's Nuclear Strategy and Foreign and South Korean Strategy

*Chung, Sung-Yoon*

The core of the North Korean security strategy is the nuclear strategy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Kim Jong Un's security strategy, which is centered on nuclear power, will be presented. Second, how the Kim Jong Un regime's nuclear weapons strategy is reflected in North Korea's foreign and South Korean strategy will be analyzed. Finall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lternatives to what direction South Korea should design its foreign and North Korean strategies in will be suggested. In particular, this study uses "coercive strategy" as a possible application theory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In other words, this study defines the security strategy of Kim Jong Un as a typical 'coercion strategy'. After Kim Jong Un came into power, the Kim Regime's strategy has adopted an uncompromising policy that relies heavily on excessive confidence and expectation in nuclear weapons, not only in its approach towards international relations, but also inter-Korean relations.

The body and conclusion in this study present several key arguments. First,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is alm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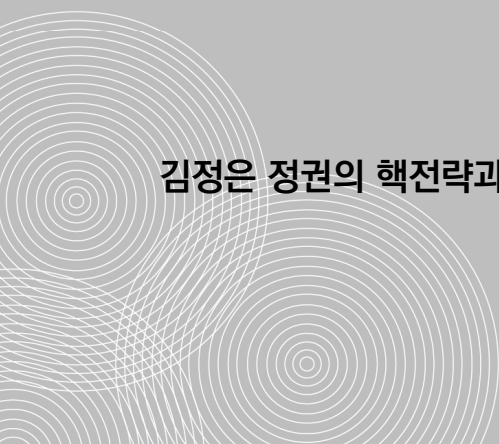
## Abstract

complete, and North Korea will stick to its existing offensive and intransigent strategy and try to retain a large amount of nuclear weapons for a short period of time. Second, North Korea is highly likely to continue ignoring and alienating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se strategic goals. This is becaus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onsiderably underestimates the strategic value of South Korea. Third, North Korea's high-intensity provocation will continue in the process of enhanc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Thus, South Korea should make strengthening its nuclear deterrence a top priority,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the relaxation and unraveling of the ROK-US alliance. Finally, whil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extremely severe and urgent, it is imperative to take every cautious effort to avoid responding with underestimation and overreaction.

**Keywords:** Nuclear Force, NK's Nuclear Advancement, Nuclear Strategy, Coercion Strategy, N.K.-U.S. Relations, S.K.-N.K. Relations

# I. 서론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 1. 연구 목적 및 연구 필요성

안보전략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한다. 북한 안보전략의 핵심이자 요체는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세 가지이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중심의 안보전략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중심 안보전략이 북한의 대외 및 대남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전략에 대응해 한국이 어떠한 방향의 대외 및 대북 전략을 설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력한 적용 이론으로 ‘강압전략(coercive strategy)’을 원용한다. 즉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을 ‘강압전략’의 전형으로 파악하고,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대외관계뿐 아니라 대남관계에서도 핵무기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기대효용에 의지해 강경한 전략과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왜 강압전략에 기초해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과 대외·대남 전략을 분석해야만 하는가? 김정은 5년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은 핵능력에 대한 과장과 핵억지에 대한 맹신을 바탕으로 공세적 대외전략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적극적 대외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강압외교로 특징되는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을 자세히 구명해야지만 북한의 전략적 의도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강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대외전략 수립 시 한국 정부의 과소 및 과잉 대응을 지양할 수 있는 전략적 해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핵전략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규정하고자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북한의 강압적 대남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역(逆)강압전략을 포함해 우리 정부의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핵 억지에 대한 군사적 도전이 제기될 경우 한국이 강제(compellence)로 전환해야만 하는 시기와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도 부가적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과장으로 남북 대화 과정에서 협상력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북 교섭능력의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고려해야만 하는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 2. 연구 배경: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한반도 정세는 날로 엄중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수위와 빈도는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도발의 지속에 따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고 우려했던 북핵 고도화가 종착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북핵 고도화 진행 과정에서 다양하고도 심대한 파급영향이 발생했다. 첫째, 북핵 고도화가 종착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강도와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핵무기 고도화의 지속으로 인해 역내 정세가 대북 ‘압박과 제재 국면 강화’로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핵 위협 증가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손상되고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을 두고 주요국 간 이해와 견해가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 제재와 압박에 강력히 저항하고 비핵화에 대한 비타협적인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의 상호 타협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 가. 북핵 고도화 완성 단계 진입과 고강도 도발 가능성 증가

첫째,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핵전력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다. 특히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약 2년간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프로그램이 중국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등장 후 북한은 단기간 4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모든 핵실험은 직전 핵실험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거나 더 상위의 기술적 진보를 의미했다. 2013년 2월에 실시된 3차 핵실험을 통해서는 기존 무기용 플루토늄에 더해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활용능력을 과시했다. 2016년 1월의 4차 핵실험을 통해서는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핵물질인 삼중수소와 리튬6 등을 활용한 핵융합기술 확보를 실험했다. 북한은 이를 '시험용' 수소탄 실험 완성이라 주장했다. 4차 핵실험 이후 1년 8개월만인 2017년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 완성을 선언했다. 당시 국내외의 주요 기관이 측정한 핵실험 폭발력은 약 50~200kt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의 4차 핵실험에서 시연했던 핵융합기술력이 진일보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통해 10~30kt 수준의 폭발력을 과시했다. 이는 북한이 원자탄(핵분열탄)의 표준형 폭발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 네 차례 핵실험의 폭발력이 최대 6~7kt 수준에 머물면서 일각으로부터 북한의 핵기폭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을 의식한 전략적 도발이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표준형 원자탄(핵분열탄) 기술을, 6차 핵실험을 통해서는 수소탄(핵융합탄)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sup>1)</sup> 북한의 핵실험 환경 여건상 더 이상의 핵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기폭 장치의 고도화는 사실상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기폭 장치의 고도화와 더불어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의 기

<sup>1)</sup> 후술하겠지만 여기서 언급한 수소탄은 엄밀히 말하면 '중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통 수소탄은 1단계 핵분열, 2단계 핵융합, 3단계 핵분열 과정을 통해 메가톤급(Mt) 이상의 폭발력을 갖는다. 하지만 수소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3단계를 거치지 않은 중폭핵분열탄 또한 핵융합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북한 스스로가 이를 수소탄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6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미니)수소탄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라 간주한다.

술적 고도화도 조만간 완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이후 집중적인 실험으로 중장거리용 고출력 엔진 추진력 향상과 단 분리 기술, 기존 액체연료의 결합을 보완할 수 있는 고체연료 활용능력, 이동 발사대(Transporter Erector Launcher: TEL)의 안정성·기동성·은폐성 강화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중화된 미사일 체계를 구축했다. 2017년 하반기 현재 아직 북한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용 탄두 재진입 기술, 항법유도 및 통제 능력 부분의 기술적 능력만 보완하면 핵무기 발사체의 기술적 고도화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기존 2022년 → 2020년 → 2018년으로 급속히 앞당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sup>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진행되고 확인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완성 시점이 임박했다는 현실은, 북한 지도부가 지금까지 미진했던 나머지 핵무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은 자동적으로 대북제재와 압박 수준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중단이 정세가 ‘북핵 고도화 최종 완성을 위한 고강도 도발 지속’과 ‘대북제재와 압박의 강화’라는 악순환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관성 이외에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 과업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행보와 추진전략에서도 북한의 공세적 도발의 지속을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2년 북한 정권을 통치한 직후부터 핵무력 완성을 위한 제도적, 법적 차원의 정비에도 주력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과 2016년, 핵 보유국 지위를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각각 명기했다. 또한 김정은

<sup>2)</sup> 정성윤,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와 정세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2 6, 2017.09.11.), p. 4, <[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contId=1485185](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contId=1485185)> (검색일: 2017.10.01.).

은 2016년 이후 핵실험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신변상 위험 노출을 무릅쓰고 미사일 실험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등 김정일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고 과감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아울러 김정일 정권 시대와 비교해 볼 때 훨씬 공격적인 핵무기 사용을 주장하며 위협하고 있다.<sup>3)</sup> 특히金正은의 도발적인 정책결정 성향과 대내결속을 위한 정치적 행보 등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 1/3가량을 제약한 안보리 제재결의안 2371호와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 수단이었던 섬유제품 수출의 완전 차단, 석유제품 수출의 절반 감축, 신규 해외노동자 파견의 금지가 규정된 안보리 제재결의안 2375호가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준수될 경우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金正은 정권은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타협 대신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높이려 할 것이다. 즉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 북한의 경제타격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위 필요성 증가 → 북한의 도발 강행 → 제재 강화와 같은 악순환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 나. 제재 국면 장기화 추세 속 주요국 딜레마 증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이해와 입장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으며 단기간내 이러한 정세의 급격한 변동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중단을 선언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북한과의 유의미한 대화는 힘들며, 따라서 당분간 강력한

<sup>3)</sup> 김정은 정권이 채택하고 있는 핵전략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 비해 훨씬 노골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러한 경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최근 연구는 다음과 같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1 (Spring 2015), pp. 71~83.

대북제재와 압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과 동일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한·미·일과 간극이 크다. 특히 중국은 2016년 2월 ‘평화협정-비핵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한 데 이어 2017년 들어서는 비핵화 로드맵으로는 쌍궤병행(雙軌並行: 북한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구축 병행)을,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식으로는 쌍중단(雙中斷: 북핵 도발 중단 및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쌍중단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이거나 쌍궤병행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타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2016년 5월의 조선노동당 7차 대회 이후 핵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미국과 대등한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핵군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현재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평화협정-군축’ 프레임 대(對) 한·미·일의 ‘비핵화-제재·압박’ 프레임 대(對)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프레임이 대립 및 혼재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sup>4)</sup>

북핵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딜레마가 심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미중 무역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강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게도 더욱 적극적인 대북제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카드를 활용할 경우, 한국 정부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요구할 것이고 이 과정

<sup>4)</sup> 북핵 비핵화 프레임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90년대 초반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는 북미 양자 관계를 통해, 2000년대 중반 2차 핵 위기 발발 초기 국면에는 6자 회담이라는 다자적 프레임을 통해 북핵 문제가 다루어졌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미국·일본·중국·북한이 서로 타협하기 쉽지 않은 세 가지 해결 프레임을 각기 고수함으로써, 비핵화 프레임에 대한 관련국 간 협의 시점에 많은 외교적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성윤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318.

에서 양국 간 갈등(decoupling)이 야기될 수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더욱 향상시킨다면 미국 내에서 ‘북한 요구의 전격 수용을 통한 타협국면 선택’과 ‘북핵 위협 제거를 위한 군사력 사용’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 선호가 극단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은 각각 북핵 해법 과정에서 소외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대라는 중대한 도전요소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대북제재와 압박 과정에서 미중 협조체제의 방향에 따라 북한 지도부 또한 안보적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즉 지금과 같이 미중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경우, 북한은 중국의 대북제재 수준 격상, 미국의 (제한적)군사력 사용에 대한 중국의 용인 가능성 및 미중 합의에 의한 ‘강제적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미중 협력이 균열 및 약화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옵션 투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대북 강압에 적극 협조하더라도 전략적 부담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에 협조할 시, 협력의 방식·강도·범위·수단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이 미국의 대북 강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미국의 대중 강압에 직면해 미중 관계,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북한 도발에 따라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에도 동시에 대응해야만 하는 딜레마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sup>5)</sup>

미중을 비롯한 동북아 강대국들의 북핵 해법에 대한 전략적 불일치와 제로섬적 딜레마 증가는 결국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북핵 정세가 제재 국면 출구 합의를 위한 타협모드보다는 북한의 강력한 저항과 미국의 추가 제재 및 압박으로

<sup>5)</sup> 정성윤,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와 정세전망,” pp. 3~4.

인한 북미 간의 강대 강대립 국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을 의미한다.<sup>6)</sup>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는 유엔안보리의 결정이나 강대국들의 용인이 없다면 지속된다. 특히 사실상 제재 주도국인 미국과 이에 저항하고 있는 북한이 현재와 같이 강경한 상호 입장을 고수하는 한, 당분간 제재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 전략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세가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7)</sup>

#### 다. 북미 간 전략적 타협 가능성 저하

북미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점도 비타협적 북핵 정세 지속의 또 다른 주요 이유이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북미 간 2·29 합의를 파기한 이후 현재까지 비타협적 대미 강경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2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타협을 줄곧 거부해 왔다. 미국은 2014년 중반까지 소위 2·29 합의 플러스 알파를 대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미국이 다소 유연한 입장에서 소위 ‘탐색적 대화’를 추진했으나 김정은 정권은 이 또한 거부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면의 전략적 공간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관계 설정보다 도발을 통한 압박을 선택했다.<sup>8)</sup> 김정은 정권은 2016년 하반기경 2017년 과업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철저한 대미 비타협 강경 정책 고수를 통해 조기에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었을

<sup>6)</sup> 신중호 외,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55~72.

<sup>7)</sup> 위의 책, pp. 55~57.

<sup>8)</sup> 정성윤, “북한의 IRBM 시험 발사 평가와 북미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06, 2017.02.24), pp. 3~5, <[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contId=1478169](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contId=1478169)> (검색일: 2017.05.05).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략 방침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2017년 정세 속에서 몇 차례 타협국면으로 정세 전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도발을 통한 전략적 가치의 고양과 핵무력 조기 건설에 매진하였다. 즉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 정권 붕괴, 급속한 통일(흡수통일), 38선 이북으로의 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소위 '4NO 원칙'을 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베를린 선언을 통해 이를 재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인 화성-12형의 실전 발사 등으로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 위협을 노골화했으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ICBM급인 화성-14형 실험과 6차 핵실험을 순차적으로 강행했다.

미국은 북한의 공세적 전략에 대항해 대북정책의 기초를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설정하였다. 이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강압을 통해 북핵 정세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미국은 무역 부문에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중국의 대북 관여를 높이는 방식을 지속할 것이다.<sup>9)</sup> 즉 미국은 당분간 대중·대북 동시 압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구축 결심과 의지 그리고 정책결정 내용들을 변경시킨 후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인하고자 한다.<sup>10)</sup> 이러한 미국의 강압외교전략은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서도, 가급적이면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선택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강압전략을 투사하면서도 2017년 7월 이후부터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북한과의 대

---

<sup>9)</sup> 미국은 2017년 4월 미중정상회담 이후 미중무역 문제를 북핵 문제와 적극 연계하고 대북 군사적 옵션 투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중국의 좀 더 적극적인 대북제재 및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정성윤, “북핵 정세의 특징과 우리의 대응전략,” 『제2차 KINU 평화포럼』 (기조 발제문, 2017.08.07.), p. 2.

<sup>10)</sup> 정성윤, “북한의 IRBM 시험 발사 평가와 북미관계 전망,” pp. 4~5.

화 재개 조건을 다소 낮추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1)</sup> 김정은 정권은 대북 적대시 정책(제재 철회·한미연합훈련 중단·평화협정)의 철회를 미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도발 모라토리엄만을 대가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요구들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수준에 상당히 근접하는 인센티브를 미국이 제공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요구 수준을 스스로 낮추어야지만 대화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즉 현재 정세 여건상 당분간 북한과의 비핵화 타협은 상당히 어렵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sup>12)</sup>

북한이 이러한 비타협적인 대미 관계를 고수하고 고강도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제재와 압박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고통을 감내 가능한 비용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 정권은 제재와 압박으로 인한 단기적 손실보다는 핵무력 구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전략적 셈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큰 조건들을 내세우며 대화 재개 요구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설사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미국이 당장 손해를 감수하며 받아들일 긴급한 이유가 없는 조건들에 대해 큰 대가를 요구하면서 타협을 거부할 것이다. ‘군축’, ‘핵동결-평화협정’이 대표적이다.<sup>13)</sup>

11) 정성운,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와 정세전망,” p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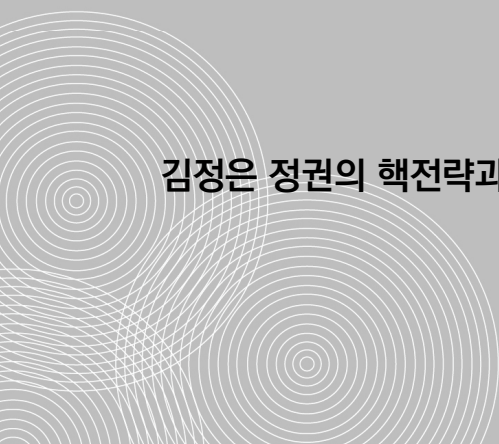
12) 위의 글, pp. 3~4.

13)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상당히 높고 미국에 대한 2차 타격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군축을 불필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핵동결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과 긴박감 또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동선, “국제사회의 파급영향,”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83~88.



## II. 적용 이론: 강압전략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 1. 강압의 개념과 분류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은 그 본질적·현상적 측면에서 무력적 수단과 유희의 수단을 병행 및 교차시키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강압 (coercion)’ 하는 것이다.<sup>14)</sup> 강압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상대의 행동방식이나 의지 그리고 결심을 변화시키려는 행동 및 전략을 말한다.<sup>15)</sup> 통상 강압전략에서의 강압은 군사적 강압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외교·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위협 또한 넓은 의미의 강압으로 볼 수 있다.<sup>16)</sup> 강압은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특징들이 있다.<sup>17)</sup> 첫째, 강압은 상대 적국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무력 사용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즉 강압이란 군사적 행동이 강압대상국의 후속 정책결정과 정책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sup>18)</sup> 둘째, 하지만 강압의 목적이 강압대상국을 완전히 파괴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즉 제한적으로, 강압 대상국에 대한 무력 사용 위협이 신뢰성을 가질 정도로만 사용할 때 성공적이다. 따라서 강압은 위협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을 경우 가장 성공적

<sup>14)</sup> 강압전략과 강압외교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였음. Alexander L. George, David K. Hall and William E. Simon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Laos, Cuba, Vietnam* (Boston: Little, Brown, 1971); Alexander L. George,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1); Robert J. Art, and Partick M. Cronin, eds.,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3).

<sup>15)</sup>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6), p. 3.

<sup>16)</sup> 본 논문에서는 강압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한다. 상대방의 행위(혹은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 외교단절을 위협 혹은 시행하는 경우가 정치외교적 강압에 해당된다. 아울러 경제제재를 단행하는 경우는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강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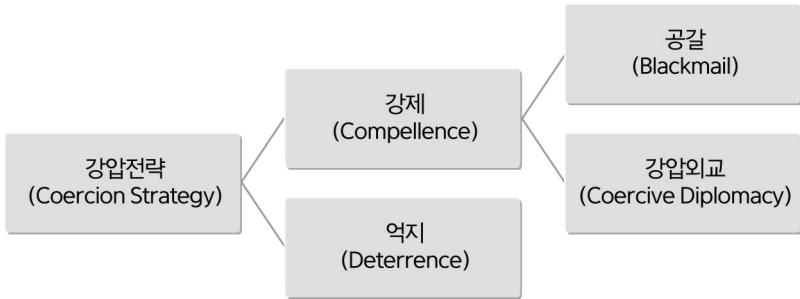
<sup>17)</sup> 정성윤, “북한 화전양면 전략의 특징과 전망,” 『전략연구』, 제19권 제1호 (2012), p. 67.

<sup>18)</sup> 정성윤, “미국의 대북 무력강압 실패에 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2호 (2014), p. 147.

이다.<sup>19)</sup> 마지막으로 강압대상국과의 타협이 전적으로 거부당하는 경우, 양 진영 간 충돌사태는 종종 군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되기도 한다.

통상 강압은 <그림 II-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제(compellence)와<sup>20)</sup> 억지(deterrence)로 구분된다.<sup>21)</sup> 그리고 강제는 다시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와 공갈(blackmail)로 나누어진다.<sup>22)</sup>

그림 II-1 강압전략의 분류



자료: 정성운, “북한 화전양면 전략의 특징과 전망,” pp. 66~68의 내용을 인용 및 보완하여 저자편집

<sup>19)</sup>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폭력’의 개념과 구분된다. 폭력은 실제로 힘의 사용을 전제로 그 효과 여부를 판단한다. Robert J. Art, “The Fungibility of Force,” in *The Use of Force: Military Power and International Politics*, 6th edition, eds. Robert J. Art and Kenneth N. Waltz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4), pp. 3~12.

<sup>20)</sup> 본 연구에서 강제(compellence)의 개념은 쉘링(Schelling)의 분석 개념을 차용한다.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p. 13~29.

<sup>21)</sup> 쉘링은 강압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포를 통해 저지하려는 노력(억지)과 현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강제)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페이프(Robert Pape)는 쉘링의 강제개념을 강압으로 명명한다. 하지만 페이프도 밝히고 있듯이 내용상 차이는 없다. 따라서 페이프는 강제와 억지가 아닌, 강압과 억지를 대비시켜 개념화를 시도한다.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pp. 72~73; Robert A. Pape, *Bombing to Wi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p. 4~9.

<sup>22)</sup> 한국 학계에서 가끔 ‘compellence’를 ‘강제’가 아닌 ‘강압’으로, ‘coercion’을 ‘강압’이 아닌 ‘강제’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coercion’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개념상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는 ‘coercive diplomacy’를 ‘강압외교’로 범용하기 때문이다.

강제와 억지를 대비시키면 다음과 같다.<sup>23)</sup> 먼저 시기와 주도권 측면에서, “강제가 위협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억지는 위협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지에 영향을 주어 어떠한 행동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가 적극적, 능동적인 개념이라면 억지를 위한 위협은 시한을 정해두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의 경우 상대국가의 효과적 순응을 위해서는, 상대국가가 문제에 대한 긴박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sup>24)</sup> 둘째, 강제전략을 행사하려는 국가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 상대국가가 ‘이미 시작한 행위’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국가가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반응을 보일 때까지 그 행동을 조절하므로, 통상 강제전략을 행사하려는 국가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 반면 억지전략은 상대국가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자국의 대응방향도 결정되므로 상대국가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셋째, 강제전략은 군사적 수단과 함께 정치·경제·심리적 수단 등을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지만,<sup>25)</sup> 억지전략은 위협이 행사되는 ‘순간’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전략은 시행의 측면에서 억지전략보다 쉬워 보일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원래대로 복구시켜 놓으려는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강제전략은 ‘공갈’과 ‘강압외교’로 구분된다.<sup>26)</sup> 공갈은 상대국가에 대

<sup>23)</sup> <그림 II-1>과 강제와 억지의 비교 부분은 저자의 다음 논문 일부분을 인용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정성운, “북한 화전양면 전략의 특징과 전망,” pp. 66~68.

<sup>24)</sup> Stephen J. Cimbala, *Coercive Military Strategy* (Texas Commerce: Texas A&M University Press, 1998), pp. 7~17.

<sup>25)</sup> 강제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압박이라고 협의로만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동선, “북한에 대한 강압: 효과와 전략,” 『전략연구』, 제19권 제2호 (2012), p. 120; Alexander L. George,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pp. 4~7.

<sup>26)</sup> 강제와 강압외교는 상대국가가 이미 시작한 행위 혹은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위협을 행사하는 국가가 채택하는 수단과 방법과 관련해, 강제가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다. Peter Viggo Jakobsen, “Coercive Dipl

한 위협만을 투사한다는 점에서, 비위협적인 설득과 협상 등 긍정적 유인을 포함하는 강압외교와 구분된다. 또한 공갈은 보통 강압국이 ‘공격적 의도’를 견지하는 데 반해, 강압외교를 투사하는 국가는 ‘방어적’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sup>27)</sup> ‘강압외교’는 이미 진행 중인 상대국가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 ‘제한된’ 힘과 위협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방어적 혹은 공격적 목적에 상관없이 ‘총체적 무력 사용 (full-scale or brutal use of force)’을 사용하는 군사전략과 구분된다.<sup>28)</sup> 즉 강압외교에서의 강압의 의미는 적의 침략적 행위나 의도를 물리적인 힘으로만 좌절시키고자 하는 사전적 의미의 강압이 아니라,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피하고 무력 사용 이전에 상대국을 순응시키기 위해 ‘설득적 방법’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비중을 둔 전략이다.<sup>29)</sup>

## 2. 강압메커니즘

강압전략을 구상하는 국가는 강압을 위한 능력 보유뿐 아니라 강압메커니즘의 효율적 구성에도 노력한다.<sup>30)</sup> 이는 강압을 통한 위협이나 고통을 통해 강압대상국이 굴복 혹은 순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강압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강압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유와 경로를

---

omacy,” in *Contemporary Security Studies*, 2nd edition, ed. Alan Colli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279~280.

<sup>27)</sup> Lawrence Freedman, “Strategic Coercion,” in *Strategic Coercion: Concepts and Cases*, ed. Lawrence Freedman (Oxford: Oxford University, 2003), pp. 18~19; Alexander L. George,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pp. 10~11; 이동선, “북한에 대한 강압: 효과와 전략,” p. 120.

<sup>28)</sup> Peter Viggo Jakobsen, “Coercive Diplomacy,” pp. 280~281.

<sup>29)</sup> Alexander George and William E. Simons, ed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pp. 7~8.

<sup>30)</sup> 상대 적국과 대치하는 국가가 강압전략을 채택할 때, 강압국가는 강압의 수단과 목표 간 연계에 주목한다. 즉 강압은 수단, 메커니즘, 결과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개념틀이다.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강압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목표 설정, 효과 발생 이유, 강압 과정에서의 수혜자와 피해자의 예상 등을 계산하도록 유인한다. 하지만 반드시 유념해야만 할 사항은 특정 강압전략이 만능의 보검처럼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강압메커니즘은 너무나 다양하며 모든 메커니즘은 각각 일정 정도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북한의 강압전략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강압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대표적 강압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sup>31)32)</sup>

### 가. 정치적 권력기반의 잠식(power base erosion): 정권과 엘리트 그룹 간의 관계 위협

통상 강압국은 강압대상국의 권력기반을 잠식함으로써 강압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어느 국가든 국가는 정치 지도자 개인이나 지도그룹을 지원 및 후원하는 지지층으로 구성된다. 권위주의국가나 독재국가 혹은 왕정국가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하다. 특히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경우 군부, 특정 정당, 소수 권력자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정치 권력자에게 이들 그룹과 개인들은 보통의 국민들과 달리 취급된다. 만약 강압국이 이러한 권력 생태계를 위협해 개인이나 정파의 권력 장악 가능성이나 유지력을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면, 강압국의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영향력의 전멸을 회피하기 위해 강압에 대한 순응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절대 권력자가 저항을 선택하는

<sup>31)</sup> 강압메커니즘은 북한의 안보전략 분석에도 유용할 뿐 아니라, 한국의 대북제재와 압박 전략의 메커니즘 구성에도 전략적 함의가 있다. 이미 밝힌 바처럼 강압의 범위는 넓으며 특정국가의 강압에 대한 효율적 대응으로 역(逆)강압전략(counter-coercion)도 채택되기 때문이다.

<sup>32)</sup>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강압전략메커니즘들의 주요 내용은 바이먼(Daniel Byman)과 왁스먼(Matthew Waxman)의 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Daniel L. Byman and Matthew C.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48~86.

경우 권력기반층이 지도층에 반기를 들고 저항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정권과 그 권력기반의 관계는 강압을 위한 효과적인 압박점(pressure point)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협소한 권력기반에 장기간 의존하는 강압대상국은 이에 대한 취약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므로, 보통 강력한 내부통제 역량을 평상시 구축한다. 아울러 숙청과 같이 공포정치를 일상화해 내부적 균열을 억제하려 한다. 미국의 1차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 대한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나. 사회동요(Unrest): 대중의 불만 유도

핵심 권력기반을 잠식하고 균열시키는 여의치 않은 경우 국민들 전체 혹은 주요 계층을 대상으로 강압메커니즘을 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가끔 국민들의 저항을 지지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북한이 주민의 고통을 미국의 부정의한 제재와 압박 때문이라 선전하며, 오히려 국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rally effect). 하지만 강압이 적절히 구사된다면, 정치지도층에게 강압에 대한 승복을 요구하지 않으면 축출하겠다고 국민들이 위협할 수 있고, 때로는 이러한 위협이 내란이나 봉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이 징벌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하지만 이에 부작용도 수반한다. 민간인들에 대한 징벌에 정권지도자가 강렬히 맞서는 경우, 비록 정치 군사적 승리는 챙기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대중의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

### 다. 관계 단절(Decapitation): 권력 지도층의 신변 위협

엘리트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해 강압대상국의 정책결정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외에 강압국은 강압대상국 지도층의 안위 자체에 위협을 직접 가할 수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의 선호에 직접 강력한 영향력을 가하



려는 노력이다. 대통령이나 독재자에 대한 암살 위협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비타협적인 절대 권력자의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압 후 다른 정권이나 개인에게 권력을 이양시킴으로써 정책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냉전 기간 미국이 지하대피소에 피신한 소련 지도자를 1차 핵공격으로 암살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이 실제 예이다. 이러한 강압메커니즘은 지도층에 대한 강압이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효과에도 주목한다. 즉 공포에 직면한 지도자의 순종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지도자의 생명과 안위, 그 자체가 강압의 압박점은 아니다. 특히 현대에서 이러한 강압 방식이 갈수록 선호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책과 이념에 개인적으로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굴복하기보다는 죽음을 무릅쓰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아울러 강압국에 대한 정치적 오명이 가해지거나 도덕적 비난에 직면하게 하므로, 실제 민주주의 국가가 강압전략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즉 강압국에게 부가되는 정치적 비용의 가중이 강압국을 신중하게 만들 수 있다.

## 라. 국가 능력 약화(Weakening): 국가의 총체적 능력 약화

강압대상국 국민이나 엘리트 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국가 경제력과 사회응집의 근간구조인 산업, 통신 등 시설을 파괴하는 것으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강압은 피폐에 대한 위협으로 국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전체의 희생이 클 때 지도자가 굴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 이러한 강압의 대표적 사례가 핵공격 위협이다. 핵공격은 정상적인 정책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핵공격에 아주 심오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능력 약화메커니즘은 그 수단이 핵공격이든 대규모 경제적 타격이든, 강압대상국의 지도자들, 특히 독재국가 지도자들의 정책 전환에 직접적 효과가 크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독재국가 지도자들은 국

가 전반의 안위와 타격에 무관심하다. 또한 부분적 국가능력 약화에 직면한 정부가 민간부문이나 기타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해 손실을 상쇄하려 하기 때문에, 응징이 과다하지 못하거나 분산되는 경우에도 강압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 마. 거부(Denial): 정치·군사적 승리의 방해

강압메커니즘의 또 다른 형식은 강압대상국의 승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원하는 미래의 편익을 달성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역사적 강압 사례의 교훈에서 비롯된다. 즉 강압대상국이 자신들의 전략이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각할 때 강압국과의 협상에 임한다는 명제이다. 실제 무력 갈등을 빚는 국가들 간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거부메커니즘 방식으로는 게릴라 전투를 지원해 강압대상국을 지치게 하는 것, 군사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 전선으로의 군수 물자 보급을 차단하는 것, 항공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것, 통신과 명령 체계를 교란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거부메커니즘은 그 자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강압대상국이 채택한 전략의 특성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아울러 강압대상국의 지도부가 군사적 패배를 감내하고 정치·외교적 승리의 확실한 담보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거부 전략의 궁극적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거부적 메커니즘의 또 다른 한계는 궁극적 효과를 달성하기까지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결국 강압대상국의 지도자나 정책결정그룹이 자신들의 전략이 실패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실패할 때까지 강압국이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 인식할 때까지 순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 과정에서 강압대상국의 지도자들이 강압국이 먼저 지쳐서 전략을 포기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면 오히려 강압에 더욱 맹렬히 저항하는 것도 효과 발생의 제한 요인이다.

## 바. 간접 강압(Second-Order Coercion)

강압국의 직접적인 압박만으로 강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강압국들은 강압대상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를 우회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궁극적인 강압의 효과를 달성하려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불충분한 경우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영향력이 압도적인 중국을 대신 압박함으로써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간접 강압에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우선 간접 강압대상국이 애초의 강압대상국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야만 한다. 특히 강압대상국의 정치 지도부에 대한 영향력, 국가 경제 전반, 혹은 국민들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야만 한다. 둘째, 간접 강압대상국에 대한 강압국의 영향력이 우세해야만 한다. 간접 강압국의 능력과 영향력이 우세하더라도 간접 강압국이 그 능력의 행사를 거부할 경우 간접 강압은 작동되지 않거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러한 간접 강압은 보통 강압대상국에 대한 직접 강압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강압국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국가(간접 강압대상국과 직접 강압대상국)에 대한 강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강압국의 입장에서 훨씬 많은 자원을 동원하게 만든다. 강압국이 감수해야만 하는 기대 손실뿐 아니라 두 강압대상국들에 대한 보상 총액도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간접 강압은 보통 직접 강압의 효과가 난망한 경우 군사적 옵션과 같은 극단적 조치 강구 이전에 외교적 차원에서 고려된다. 관건은 최초 강압자의 최종적 목표에 부합되는 제3자의 강압 목표와 수단을 채택하는데, 두 강압국 간 협의와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간접 강압국은 강압국의 요구와 압박에 직면해 강압 동참의 수위 조절을 단계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적인 강압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중 강압에 직면한 강압대상국이 간접 강압국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대항적

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간접 강압 수행 시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이다.

### 3. 강압전략의 유형과 성패 요인

국가안보전략 연구에서 통상 강압의 방법은 처벌을 통한 강압(coercion by punishment)과 거부를 통한 강압(coercion by denial)으로 대별한다.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강압전략은 처벌전략(punishment strategy), 위험제고전략(risk strategy), 참수전략(decapitation), 거부전략(denial strategy)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3)</sup> 이러한 분류는 보통 강압의 구체적 목표와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기대 비용과 혜택에 따른다.<sup>34)</sup>

먼저 처벌전략은 강압대상국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피해나 고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즉 강압대상국이 기대하는 이익보다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험제고전략은 처벌전략을 실행하면서 강압대상국의 순응의 정도에 따라, 손실이나 위협의 가능성을 천천히 높이는 전략을 말한다.<sup>35)</sup> 이 경우 강압대상국이 불응하는 시점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확정하

---

<sup>33)</sup> 앞서 언급했듯이 페이프의 강압의 개념은 강제에 해당하므로, 위 분류는 엄밀히 말하면 강제전략의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상기 강압전략의 분류는 페이프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강압전략들은 강압메커니즘의 유형화와 일맥상통한다. 정성윤,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2호 가을호(2014), pp. 10~12. 다니엘 바이먼(Daniel L. Byman)과 메튜 왁스만(Matthew C. Waxman)은 이를 권력기반 잠식(power base erosion)·강압대상국의 사회동요(unrest)·참수(decapitation)·국가전반에 대한 피해와 약화(weakening)·거부(denial)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 권력기반 잠식, 사회동요, 국가전반에 대한 피해와 약화는 ‘처벌전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Robert A. Pape, *Bombing to Win*, pp. 13~57; Daniel L. Byman and Matthew C.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pp. 50~82.

<sup>34)</sup> 페이프는 “저항비용과 저항으로 인한 고통의 가능성이, 양보로 인한 혜택의 손실과 지속적 저항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 큰 경우 강압대상국은 굴복한다”고 주장한다. Robert A. Pape, *Bombing to Win*, pp. 15~16.

<sup>35)</sup> 셀링은 강압대상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높이면, 결국 강압대상국이 굴

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sup>36)</sup> 참수전략은 강압대상국 지도층의 안위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sup>37)</sup> 만약 지도층을 제거하지 못해도 그 시도만으로도 지도층을 겁박하여 굴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전략이다.<sup>38)</sup> 거부전략은 강압대상국의 목표 달성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앞서 3가지 전략이 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주력하는데 반해, 거부전략은 강압대상국의 군사적·정치적 승리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거부전략은 강압대상국의 지도자들이 “강압국에 굴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가만 치르게 되고 혜택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달성 가능하다.<sup>39)</sup>

강압의 성공 요건, 특히 이러한 요건들이 강압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환경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즉 강압국가가 어떠한 전략을 채택할 경우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아울러 강압전략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 환경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특히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중심의 안보전략이 어떠한 파급을 야기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주목하여 연구에 진입한다. 첫째, 북한이 여타 강압 사례에서처럼 거부전략을 채택하고 있을 경우 그 효과는 달성되고 있는가?<sup>40)</sup> 보통 처벌전략과 위협제고전략 그리고 참수전략은 때때로 강압대상국 지도부의 굴복을 견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항의지를 높이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쌍방간 확전의 가능

---

복하거나 혹은 양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pp. 15~23.

<sup>36)</sup> Robert A. Pape, *Bombing to Win*, pp. 16~20.

<sup>37)</sup> 이동선, “북한에 대한 강압: 효과와 전략,” p. 134.

<sup>38)</sup> 바이먼과 왁스만은 이러한 경우가 ‘완전한’ 강압의 효과라고 주장한다. Daniel L. Byman and Matthew C.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p. 73.

<sup>39)</sup> Robert A. Pape, *Bombing to Win*, p. 66.

<sup>40)</sup> *Ibid.*, pp. 38~54; Lawrence Freedman, “Strategic Coercion,” pp. 23~36; 이동선, “북한에 대한 강압: 효과와 전략,” pp. 137~138.

성이 증대되는 부작용이 크다.<sup>41)</sup> 반면 거부전략은 상대국에 대한 불필요한 오인과 부적절한 압박점(pressure point) 제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위와 같은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sup>42)</sup> 거부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압대상국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군수시설의 파괴·물자보급 수송로의 단절·항공 방위력의 약화·통신 및 명령 체제의 교란 등이 대표적 방법이다.<sup>43)</sup> 즉 상기내용과 같은 강압국의 충분한 능력이 강압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둘째, 북한은 자신들의 핵 우위 강압의 성공을 위해 확전우세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강압의 성공을 위해서는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sup>44)</sup> 확전우세는 강압의 과정에서 강압대상국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전략적 행위이다. 즉 강압대상국이 위협에 따른 비용 지불을 거부하거나 확전을 통한 반격(counter-escalation)을 감행할 수 없도록 강압대상국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강압국의 능력이다.<sup>45)</sup> 성공적인 확전우세를 위한 조건은 두 가지이다. 우선 강압국의 확전우세 능력을 강압대상국에게 인지시켜야만 한다. 이는 강압국에게 설사 전략적 약점이 있더라도 이를 강압대상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인지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sup>46)</sup> 이러한 확전우세 능력이 효과적으로 투사되기 위해서는 강압대상국에게 강압국의 확전우세 능

41) 정성윤,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p. 11.

42) 이동선, “북한에 대한 강압: 효과와 전략,” pp. 134~136.

43) Robert A. Pape, “The Limits of Precision-Guided Air Power,” *Security Studies*, vol. 7, no. 2 (Winter 1997~1998), p. 97.

44) 정성윤,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p. 12.

45) 위의 글, p. 12; Daniel L. Byman and Matthew C.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pp. 38~39.

46) 정성윤,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p. 12; 정성윤, “미국의 대북 무력 강압 실패에 대한 연구,” p. 148.

력 보유 여부를 인식시킴과 동시에 강압 과정에서 ‘시간적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만약 강압대상국이 강압에 대한 심대한 압박감과 긴박감을 동시에 느낄 경우 강압전략의 성공 확률은 비교적 높아진다.<sup>47)</sup> 이런 이유로 확전우세 능력을 갖춘 강압국은 선전포고나 대대적인 군사력 시위를 통해 상대 강압대상국을 신속하게 압박한다. 하지만 강압대상국에 대한 긴박감 부여만으로 강압의 절대적 성공을 견인하지는 못한다. 만약 강압대상국이 강압의 지속력을 심각히 의심하는 경우 강압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압대상국은 강압의 과정에서 이의 지속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감을 상대 측에 강력히 인지시켜야만 한다. 그 결과 강압의 지속 과정에서 누적되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강압대상국이 강압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군사적 강압이 불가피할 경우, 이의 궁극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압의 목표를 명확히 그리고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up>48)</sup> 대부분의 군사적 강압의 목표는 위협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군사력을 활용한 강압은 단순한 압박과 위협만으로 강압대상국의 의지와 정책의 전환을 유도하기 난망하다고 판단할 때 선별적이고 제한된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의 군사전략과 강압전략의 목적은 상호 이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시와 달리 군사적 강압의 최종적인 목적이 군사적 승리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대부분의 군사적 강압의 목표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에 분명히 조응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강압의 상황이 강압대상국에 유리하더라도 강압대상국의 지나친 체면 손상을 지양해 강압대상국이 비교적 조기에 굴복할 수 있도록, 강압 수단의 선택과 그 적용 범위는 가능한 제한되어야 한다.<sup>49)</sup> 이는 자칫 강압의 과잉으로 인해 강압대상국 지도부의

<sup>47)</sup> Alexander George and William E. Simon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pp. 282~284; 정성운, 위의 글, p. 12.

<sup>48)</sup> Alexander George and William E. Simons, *Ibid.*, p. 280.

이목집중비용(audience cost)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통상 강압대상국의 양보와 후퇴가 난망한 상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sup>50)</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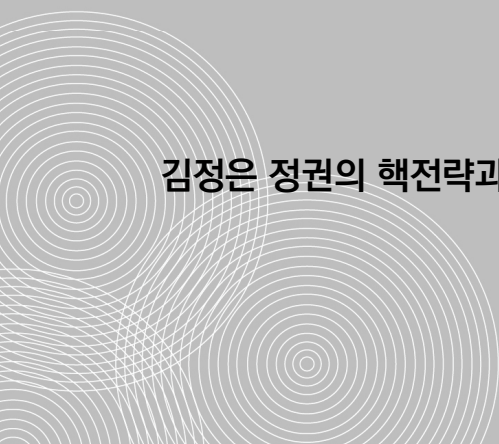
<sup>49)</sup> 이동선, “북한에 대한 강압: 효과와 전략,” p. 140; Alexander George and William E. Simons, *Ibid.*, pp. 282~284; 정성윤,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p. 12.

<sup>50)</sup> Daniel L. Byman and Matthew C.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pp. 36~37; George and Simons, *Ibid.*, pp. 282~284; 정성윤,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pp. 12~13. 강압대상국의 지도자들은 지나친 군사적 강압(over-coercing)에 직면해, 일반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었을 위험 부담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수함으로써 외압에 맞서 총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 아울러 강압국이 지나친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 강압대상국의 지도자들이 항복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굴복을 조기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Ⅲ.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 1. 핵능력 중심의 안보역량

김정은 정권의 안보 핵심은 핵무기이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무기의 압도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비대칭 전략의 능력 배양으로 안보를 추구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획득될 수 있는 외적 안보 환경만으로는 정권 및 국가의 안위를 보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비핵화를 통한 전략적 편익에 관심이 있었다면, 김정은 정권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했다. 즉 핵무기 보유에 따른 전략적 가치와 핵무기 포기에 따른 안보 취약성의 위험을 김정일 시대에 비해 과다 계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하에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핵무기의 동결이나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은 무익하다는 점이다. 둘째, 핵 고도화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감내하며 단기간 핵무력을 완성하겠다는 점이다. 셋째, 실전배치된 다량의 핵무기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강압해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이 달성되면 정권과 국가의 생존에 유리한 정세를 자신들의 힘만으로 구축 가능할 것이라 맹신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은 취임 직후부터 세부 전략을 치밀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은 세부 과업 내용 및 목표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과업의 구성은 크게 법적·제도적 토대 구축, 핵물질 시설 및 핵물질 보유량 확보, 핵기폭 및 탄두 제조 기술력 향상, 탄두 미사일 능력 향상이었다. 그리고 단계적 계획은 크게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1단계(2012년~2013년)는 법적·제도적 준비 단계이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5월에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명문화했고, 2013

년 4월에는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을 발표하였다. 2단계(2013년~2014년)는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기폭 장치 및 탄두 제조 기술력 향상과 단거리 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 성능 개선 단계이다. 고농축우라늄 중심으로 핵물질 생산 및 보유 전략을 전환하고, 이미 다량 보유하고 있던 단거리 미사일(SRBM)의 성능을 집중 개선했다. 3단계(2015년~2016년)는 핵분열 기술에 기반한 표준형 원자탄 기술 완성, 수소탄 기초 기술력 확보, 준·단거리 미사일(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MRBM) 실전 성능확보,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IRBM(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다종화 체계 구축 및 관련 기술 향상 등의 단계이다. 4단계(2017년~2018년)는 수소탄의 기술력 확보와 중·장거리 미사일의 실전 능력 확보이다. 아마도 마지막 5단계는 핵무기를 다량 실전배치하고 핵 무력의 완성을 대외로 천명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sup>51)</sup>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이 설계한 단계적 목표를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해 왔으며, 2017년 말 현재 북한은 4단계 마무리 지점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단계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추진했던 세부 안보역량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적·제도적 안보역량 구축

김정일 집권 시기 동안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핵 독트린을 밝힌 바가 없다. 즉 북한은 1차 핵 위기 이후 근 20년 동안 그들의 핵 능력과 전략에 대해 소위 핵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sup>51)</sup> 정성윤,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와 정세전망,” pp. 2~3.

이다. 2013년 3월 31일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 노선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고 혁명의 최고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전 노선’이라고 밝혔다.<sup>52)</sup> 아울러 ‘미국이 항시적인 핵위협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다져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전쟁억제력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측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법과 작전을 완성해나가고,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sup>53)</sup> 이상과 같은 전략 노선의 강조는 향후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 구속받음 없이 영구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핵무기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전원회의 직후인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 정권 최초의 핵전략 관련 지침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령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와 핵운용 전략의 일반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sup>54)</sup>

표 III-1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

조항	내용	비고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 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핵 개발 동기

<sup>52)</sup> 부승찬, “약소국 북한의 생존전략: 원칙과 구현방식,” 『국방연구』, 제60권 제2호 (2017), p. 15.

<sup>53)</sup> “당 중앙위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03.31.

<sup>54)</sup> 부승찬, “약소국 북한의 생존전략: 원칙과 구현방식,” p. 12.

조항	내 용	비고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대량보복 원칙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 위협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핵 삼원체계 추구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 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 사용 원칙 및 최종 승인 권한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 보유국과 아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핵공격 대상 명시 (한미, 미일동맹)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의 안정성 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 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 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 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 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 위협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
제10조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다.	-

자료: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조선중앙방송』, (2013.04.02.), 재인용: 부승찬, “약소국 북한의 생존전략, 원칙과 구현방식,” pp. 15~16.

위의 법령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전략은 일단 미국의 증원전력에 대한 거부(denial)와 한국과 일본의 전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제1조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때문에 정당한 방위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

지만 당시 본 법령이 발표될 시점에 북한이 미국의 선제 핵타격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핵 삼원체계(nuclear triad system)를 구축하지 못하고, 핵무기 수량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냉전 당시 미소가 채택했던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를 추구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단행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 한반도 유사상황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대규모 미 증원전력을 거부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sup>55)</sup> 이와 관련 한미 연합사령부는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약 200일 이내 미국의 항모 4개 전단, 전투기 1,100여대, 병력 42만 명 정도를 증원하는 계획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쟁 개전 이후 이러한 막대한 미국 증원 전력의 전개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제2조는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대량보복 원칙은 적의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의 선제공격에 대해, 상대방이 동원한 군사 전력 이상을 동원해 적국이 감내할 수 없는 대량의 보복을 가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 법령에서 최초로 핵에 의한 대량보복 원칙을 규정했다. 핵무기를 동원한 대량보복 원칙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제한적 핵능력을 고려해 볼 때, 미국 본토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일단 ‘한국과 일본의 전멸’을 가정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sup>56)</sup> 하지만 북한이 ICBM과 SLBM의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해 미국 본토에 대한 대량보복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제3조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생존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핵삼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ICBM, SLBM, 전략폭격기로 구성되는 삼원체계는 상대의 1차 타격(first strike)을 받은

<sup>55)</sup> 위의 글, p. 16.

<sup>56)</sup> 위의 글, p. 17.

후에도 생존한 잔존 핵무기를 동원한 보복 핵공격을 통해 적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른바 2차 타격능력(second strike)의 핵심요소이다. 즉 김정은 정권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겠지만 결국은 삼원체계가 구축돼야지만 미국의 재래식 혹은 핵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및 전략폭격기를 생산 및 보유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제한적 차원에서 ICBM, SLBM 능력의 조기 확보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sup>57)</sup>

제4조는 핵무기를 실전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규정이다. 이 조항에서 북한은 핵무기 사용의 최종 승인권자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임을 명시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북한이 이 조항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핵공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제공격을 한다면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이다. 즉 미국 등 적대적인 핵 보유국이 핵이나 재래식 무기에 상관없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이에 대해 반드시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단독의 결정으로 즉각 핵보복공격을 하겠다는 점을 공식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조는 일종의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핵무기 비보유국가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하지 않겠지만, “적대적인 핵 보유국과 야합하는” 비핵국가는 예외적으로 핵보복공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적대적인 핵 보유국을 미국으로 상정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야합하는 비핵국가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이 상정한 핵공격 대상에 한국과 일본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58)</sup>

---

57) 위의 글, p. 17.

58) 위의 글, pp. 17~18.



이상과 같이 김정은 정권은 2013년 ‘핵 보유국 지위’에 관련된 법령 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 동기, 사용 원칙, 사용 대상, 최종 승인 권한, 핵전력 강화 계획 등을 포괄하는 핵전략을 대내외에 표명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비록 전통적인 안보전략이나 핵전략에서 강조하는 2차 타격 능력은 여전히 부재하지만, 자신들이 핵무기를 동원해 미군 증원전력을 거부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전멸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핵무력을 지향할 것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결론적으로 현재 김정은 정권은 전임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핵전략과 관련해 기존의 모호성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핵보유 사실을 대내외에 표출함으로써, 평시에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최대한 억지하고 한반도 유사상황 발생 시에는 미군의 증원전력을 거부하면서 핵공격이든 재래식 공격이든 상관없이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과 일본을 전멸시키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9)</sup>

## 나. 핵물질 다량 확보를 통한 핵무기 대량 생산 기반 구축

핵무기 생산을 위해서는 플루토늄(Pu)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양질의 핵물질을 생산해야만 한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직후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다량의 핵물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핵기술 고도화 완성을 통해 핵무기 본격 생산 체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미연에 핵물질을 다량 확보해야만 단기간 핵무기 제조 목표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등장 직후인 2013년 기준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양은 대략 최소 12~38kg 정도였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보유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시설은 영변 지역에 위치한 5MW 흑연로가 유일하다. 설비용량 기준 대비 원래 생산량은 10kg 내외이나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은 훨씬 낮을 것이다.

<sup>59)</sup> 위의 글, p. 18.

이 5MW 흑연로 시설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북한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은 약 3~4kg 수준이다. 또 다른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의 경우 생산 및 보유량 추산은 원심분리기 수에 따라 결정된다. 김정은 정권 출범 당시 북한이 확보한 원심분리기 수는 2,000개였다고 알려졌다.<sup>60)</sup> 통상 원심분리기 2,000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고농축우라늄 생산량은 약 40kg 정도이다.

폭발력 15~20kt급의 표준형 원자탄 1개 완성을 위해 플루토늄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 3~6kg 정도가 필요하다. 반면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 10~40kg 정도가 필요하다.<sup>61)</sup> 따라서 김정은 정권 집권 초인 2012년 기준 북한이 생산했거나 보유했던 핵무기의 수는 상당히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플루토늄의 경우 기존 5MW 생산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고 새로운 원자로를 만들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김정은 정권은 플루토늄 이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했을 것이다.<sup>62)</sup>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플루토늄보다는 원심분리기 수를 늘려 고농축우라늄을 대량 확보하기로 계획했을 것이다.

우선 김정은 정권은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 수를 늘렸을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북한이 2013년을 전후해 영변의 농축시설 규모를 2배로 확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보유한 원심분리기는 대략 4,000개 정도라고 추정 가능하다.<sup>63)</sup> 이 경우

---

<sup>60)</sup> 이는 북한이 2010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헤커 박사에게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로 구성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에 기준하였다.

<sup>61)</sup> 동일한 폭발력의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핵물질 양에 대한 추산이 다른 것은 기술력 수준과 핵물질 손실률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sup>62)</sup> 북한의 경우 IRT-2000 연구로를 통해서도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나 그 생산량은 극히 미미하다.

<sup>63)</sup> 농축 생산량을 늘리고 농축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원심분리기 설치 공간 확장 이외에 다른 작업은 필요 없다. 따라서 농축 공장 면적이 2배 늘어난 것은 기존의 원심분리기 개수가 2배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동수 외, 『2013년 북한 핵 프로그램 및 능력평가』(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38~39.

2,000개의 원심분리기는 2010년 11월부터, 새롭게 증설된 2,000개의 원심분리기는 2013년 상반기부터 가동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추가로 원심분리기 수를 증대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의혹만 있을 뿐 분석에 활용할 수준의 구체적 정보는 부재하다.

원심분리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의 핵심 부품인 회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회전자 제작을 위해서는 플로우 포밍 머신(Flow Forming Machine)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현재 플로우 포밍 머신을 최소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1개의 플로우 포밍 머신으로 매년 약 1,000개의 회전자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김정은 정권이 2013년 이후 은닉시설에서 매년 1,000개씩의 원심분리기를 증가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기준 최대 총 7,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64)</sup>

북한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핵물질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은 2016년 10월 당시에는 플루토늄(Pu)을 약 19~48kg, 고농축우라늄은 57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2020년 10월 기준 북한은 플루토늄 31~64kg, 고농축우라늄은 약 1,130kg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폭발력 20kg 정도인 표준형 원자탄 제작에 3~6kg의 플루토늄과 10~40kg 내외의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것이지만, 6차 핵실험에서 확보한 핵융합기술을 활용할 경우 약 10kg 정도의 고농축우라늄만으로도 폭발력 최소 50kt 이상의 증폭핵분열탄, 즉 미니 수소탄을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 방식에 따라 북한이 2018년부터 핵무기를 전부 수소탄(증폭핵분열탄)으로 제조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2020년경 최대 88개

---

<sup>64)</sup> 정성윤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p. 17~19.

의 원자탄과 최대 46개의 수소탄, 즉 합계 최대 134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65)</sup> 하지만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이 비공개 핵물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핵물질 전량을 핵탄두 제작에 사용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가까운 미래에 실제 생산 및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2016년 하반기 표준형 원자탄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과, 2017년 9월의 6차 핵실험으로 핵융합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핵탄두 생산은 최근해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2017년 하반기 시점에 보유한 핵무기 수 또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핵물질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김정은 정권이 본격적인 핵탄두 대량 생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sup>66)</sup>

#### 다. 핵기폭 능력의 기술적 진화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핵탄두 제조 기술력, 즉 핵기폭 장치의 기술적 고도화가 괄목할 수준으로 향상하고 있다. 핵기폭 관련 기술 수준은 주로 북한의 핵실험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지난 11년 동안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중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차 핵실험부터 4년 동안 무려 4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2017년 하반기까지 실시한 6차례 핵실험의 탐지결과를 요약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1차 핵실험은 실패했다. 핵폭발 실험은 성공했으나 폭발력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실험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당시 핵실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sup>65)</sup> 정성윤,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와 정세전망,” p. 4.

<sup>66)</sup> 위의 글, p. 4.

않은 이유도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 III-2 북한 핵실험 탐지결과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
실험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탐지 범위	3~4.3mb	4.5~4.7mb	4.9~5.1mb	4.8~5.1mb	5.0~5.3mb	5.7~6.3mb
폭발규모 환산	1kt 미만	4~5kt	6~7kt	6kt	10~30kt	50~200kt
사용 핵물질	플루토늄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추정)	플루토늄, 중수소, 삼중수소 (증폭핵분열탄 추정)	고농축 우라늄 (추정)	플루토늄 (혹은 고농축 우라늄) 중수소, 삼중수소 (증폭핵분열탄 실험)

자료: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21의 표를 저자가 수정·보완함.

북한이 핵실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2차 핵실험 부터이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폭발력과 조정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sup>67)</sup> 2009년의 2차 핵실험 결과는 폭발력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차 핵실험보다 훨씬 진보했다.<sup>68)</sup>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은 초기 1,2차 핵실험에서는 폭발력보다 핵분열 기폭 장치의 실제 작동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차 핵실험은 김정은 집권 기간 단행된 첫 번째 실험이다. 3차

67)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 『조선중앙통신』, 2009.05.25.

68)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직전 중국에게 4kt 정도 폭발력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는 2차 핵실험에서 실현되었다.

핵실험이 이전 핵실험과 확연히 다른 점은 기존 플루토늄 대신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직후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진행하였다.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 위력 등 모든 측정 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중화된 우리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었다”고 강조했다.<sup>69)</sup>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은 북한이 기존의 핵분열 기술이 아닌 핵융합 기술을 처음으로 활용했던 실험이었다. 이는 북한이 기존 원자탄(핵분열탄)의 표준형 폭발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다음 단계의 기술적 진전을 앞당겨 실험한 것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는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sup>70)</sup> 이는 북한이 이미 그들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3차 핵실험에서 설계값과 실험값과의 비교를 통해, 표준형 핵분열탄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9월의 5차 핵실험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험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들은 북부 핵실험장에서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sup>71)</sup> 5차 핵실험은 4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기술적 의문, 즉 폭발력과 핵융합기술의 완성도 증진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강행된 실험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3차 핵실험 당시 달성하지 못했던 기술적 요소를 추후 보완

69) “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02.12.

70)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조선중앙통신』, 2016.01.06.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09.09.

하고자 했던 실험이었을 것이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수소탄 완성 실험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폭발력, 제조 환경 및 기술력, 고도화 단계, 북한의 공식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이 보유한 통상적 ‘수소폭탄’ 이라기보다는 4차 핵실험과 같은 ‘증폭핵분열탄(boosted nuclear fission bomb)’ 실험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우선 지진파 측정 범위 ‘5.7~6.2mb’와 핵실험장의 지질 환경·측정 오차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실제 폭발력은 50~200kt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구조상 250kt 이상의 폭발력을 견디기 힘들다는 분석을 고려할 경우 증폭핵분열탄의 통상 폭발력 범위에 속한다.<sup>72)</sup> 통상적으로 원자탄(핵분열탄) 표준형의 폭발력이 20kt 내외이며, 1단계 핵분열과 2단계 핵융합을 통해 폭발력을 강화한 증폭핵분열탄이 표준형 원자탄에 비해 폭발력이 2~10배 정도 높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또 다른 근거다. 아울러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이미 증폭핵분열탄 실험에 필수적인 핵물질들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은 2단계 핵융합을 위한 필수 핵물질인 삼중수소를 5MW 흑연원자로를 통해 생산했을 것이다. 또한 삼중수소 제조에 필수적인 리튬6도 북한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전초기 소련도 수소폭탄 생산 직전에 이와 유사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경우 증폭핵분열 기술은 수소탄 보유의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당시에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을 정확히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번 핵실험 직후에도 핵융합 기술력을 통한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세한 기술적 성과를 과시한 점도 판단의 근거이다.<sup>73)</sup>

<sup>72)</sup> 정성윤,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와 정세전망,” p. 1.

<sup>73)</sup> 위의 글, p. 2.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7년 하반기 기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은 핵탄두 제조 기술 고도화 단계 중, 마지막 완성 지점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 기술력의 단계는 통상 1세대 원자탄, 2세대 수소폭탄, 3세대 중성자탄으로 나눌 수 있다. 3세대 중성자탄의 경우 현재 핵무기 보유국들이 기술적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 및 배치를 한 국가는 없다.<sup>74)</sup> 따라서 현재 핵무기 보유국들은 1세대인 원자탄과 2세대인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 개발 국가들의 최종 기술적 종착역도 수소폭탄의 보유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증폭분열탄은 핵분열탄인 원자탄과 핵융합탄인 수소폭탄의 중간단계로 소위 1.5세대라고 볼 수도 있다. 즉 1세대 원자탄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가 수소폭탄을 보유하기 위해 중간단계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단행된 3차~6차 핵실험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핵무기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김정은 정권은 최소 중상급 이상의 핵기폭 장치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통상적인 수소탄의 메가톤 급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핵 보유국 수준의 기술력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100%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구력이 260kt 이상의 폭발을 견디기 힘든 물리적 환경이기 때문일 수도 있기에, 북한의 수소탄 기폭장치 제조 능력은 현실적으로 확보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

<sup>74)</sup> 정성윤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22.



## 라. 핵무기 탑재 탄두 미사일 능력의 향상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급격히 고도화되었다. 특히 북한은 기존 다량 보유하고 있던 SRBM, MRBM, IRBM의 개선 강화뿐만 아니라 ICBM과 SLBM 능력도 급격히 고도화시켰다. 우선 김정은 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직후인 2012년 4월 은하 3호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1단계 엔진 추진체가 발사 초기에 폭발함으로써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8개월 후 똑같은 실험을 통해 궤도 진입에 성공시켰다. 그리고 2016년 2월에는 기존 은하 3호보다 사거리가 더욱 개량된 형태의 은하 4호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즉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반기에 두 차례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이어서 북한은 2017년 7월 ICBM급인 화성-14형 발사 실험을 두 차례 시도해 모두 성공했다.

표 III-3 김정은 집권 시기 ICBM 관련 시험 경과

구분	시기	사거리	비행거리	탑재중량	위성궤도 진입
은하 3-1호 (광명성 3호)	2012. 4	10,000km 이상	500km	100kg(추정)	실패(초기 폭발)
은하 3-2호 (광명성 3호)	2012. 12	10,000km 이상	궤도진입	100kg(추정)	성공
은하 4호 (광명성 4호)	2016. 2	12,000km 이상	궤도진입	200kg(추정)	성공
화성-14형	2017. 7	10,000km 이상 (추정)	933km	100kg(추정)	성공
화성-14형	2017. 7	10,000km 이상 (추정)	998km	100kg(추정)	성공

자료: 저자 작성

특히 2017년 두 차례의 화성-14형 발사 실험 성공으로 김정은 정권은 ICBM 개발에 한층 진일보한 성과를 획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ICBM은 추진체의 엔진능력, 500~600kg 내외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 고온·고압 저항능력을 비롯한 재진입 기술(re-entry), 항법유도 기술, 미사일 발사대 안정성 등 다섯 가지 능력으로 완성된다.<sup>75)</sup> 김정은 정권은 2017년의 화성-14형 실험 성공으로 고출력 엔진의 성능 안정화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6차례 핵실험으로 상당한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 또한 북한은 현재 200기 내외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다양한 미사일의 집중 실험으로 발사대 활용능력 및 안정성 또한 높은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년 현재 기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진입 기술과 항법유도 기술 부문을 제외하고,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ICBM 능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sup>76)</sup>

김정은 정권은 ICBM 제조 능력과 더불어 중거리 미사일(IRBM)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초까지 북한이 공개적으로 시연한 중거리 미사일은 무수단이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상반기 두 달여 짧은 기간 동안 총 6발의 무수단 발사 실험을 했다. 이 중 다섯 발은 실패했다. 다만 2016년 6월의 발사 실험은 부분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실험을 통해 무수단을 고각으로 발사해 최대 사거리 조절 여부를 테스트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유도 비행과 탄두 재진입 관련 기술의 향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7)</sup> 특히 직전의 실험 발사 실패 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패의 원인을 찾아

<sup>75)</sup> 정성윤, “북한 ICBM급 미사일 실험의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20, 2017.07.20.), p. 1, <[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contId=1484906](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contId=1484906)> (검색일: 2017.08.01.).

<sup>76)</sup> 위의 글, pp. 1~2.

<sup>77)</sup> 정성윤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40.

성공시킨 것은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sup>78)</sup>

2017년 들어 북한은 기존 무수단 미사일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다. 북한은 2017년 SLBM 개량형인 북극성-2호와 지대지 중거리 미사일인 화성-12형의 발사에 성공했다. 북극성-2호를 통해서도 미사일의 다목적 개량 능력을 과시했다. 이는 자원 제약상 다양한 신미사일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미사일의 활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또한 화성-12형의 실전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일본 및 괌의 미군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과시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사시 미국 증원병력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를 거부하기 위한 실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정권의 ICBM, IRBM 능력은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부터 이미 한국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준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입증해 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집중적으로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준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ER이다. 북한은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10발의 노동미사일 및 스커드 ER 미사일을 발사했다. 스커드 ER은 사정거리 700km 내외이고 노동미사일은 1,000~1,300km의 사정거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즉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ER은 철저히 한국 전역을 타격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목표지점에 대한 타격 범위의 오차반경을 줄이는 등 과거에 비해 정확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sup>79)</sup> 특히 북한이 2016년 9월 5일 발사한 노동미사일 3발은 모두 1,000km를 비행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pan's

---

<sup>78)</sup> 위의 책, p. 40.

<sup>79)</sup> 위의 책, p. 41.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JADIZ)내 해상에 떨어졌는데, 이 3발 모두의 낙하지점이 반경 1km 범위 이내였다. 이는 노동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ility: CEP)’가 최소 2km, 최대 3~4km일 것이라는 기존 예상치보다 한층 향상된 결과이다.<sup>80)</sup> 이러한 능력을 볼 때 북한은 남한 내 대도시 목표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함으로써 인명을 대량 살상하거나 원자력발전소, 공항, 항만과 같은 국가 주요 기간 산업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이 보강됐다는 것을 뜻한다.

김정은 정권은 2015년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과 고도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집중 실험하고 있는 KN-11은 구소련의 SLBM R-27(SS-N-6)을 모방해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의 북한식 명칭은 ‘북극성’이다. 북한은 2015년 1월 23일 북극성의 수직발사관 사출 시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2015년 5월 8일에는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또 다른 수직발사관 사출 시험을 강행했다. 2015년 11월 28일에 처음으로 북한은 신포급(2천 줄급) 잠수함에서 SLBM을 직접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었다.<sup>81)</sup> 북한은 실패 직후인 2015년 12월 25일에 사출 시험을 다시 시도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것이라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2016년 4월 23일에는 신포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극성 발사체가 약 30km 정도 비행했다. SLBM의 최소 사거리 약 300km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북한이 탄착 지점 인근에 미리 대기해 미사일 수거작업을 했다는 점으로 볼 때, 북한이 연료량 조절 등을 통해 사거리를 미리 인위적으로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SLBM의 ‘랭발사체계(콜드 론칭, cold launching)’의 진전과도 연계된다.<sup>82)</sup> 아울러 당시 시험 과정에서 액체

---

<sup>80)</sup> 위의 책, p. 41.

<sup>81)</sup> 위의 책, p. 42.

<sup>82)</sup> 위의 책, p. 42.

연료 대신 고체 연료를 사용한 점은 SLBM의 운용 안정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하루 뒤인 2016년 7월 9일에도 SLBM 시험을 시도했다. 당시 북한이 시험한 SLBM은 발사 직후 10여 km 상공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실패 직후인 2016년 8월 24일 SLBM 시험을 다시 강행해 시험에 성공했다. 6번째 SLBM 발사 시험이었다. 당시 6차 SLBM 시험은 고각발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미사일 재원의 정상고도인 300~400km 보다 높게 비행했으며 2단계 단 분리 또한 성공했다. 이 시험에서 북한이 만약 SLBM을 50~70도 정도의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는 약 1,000km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8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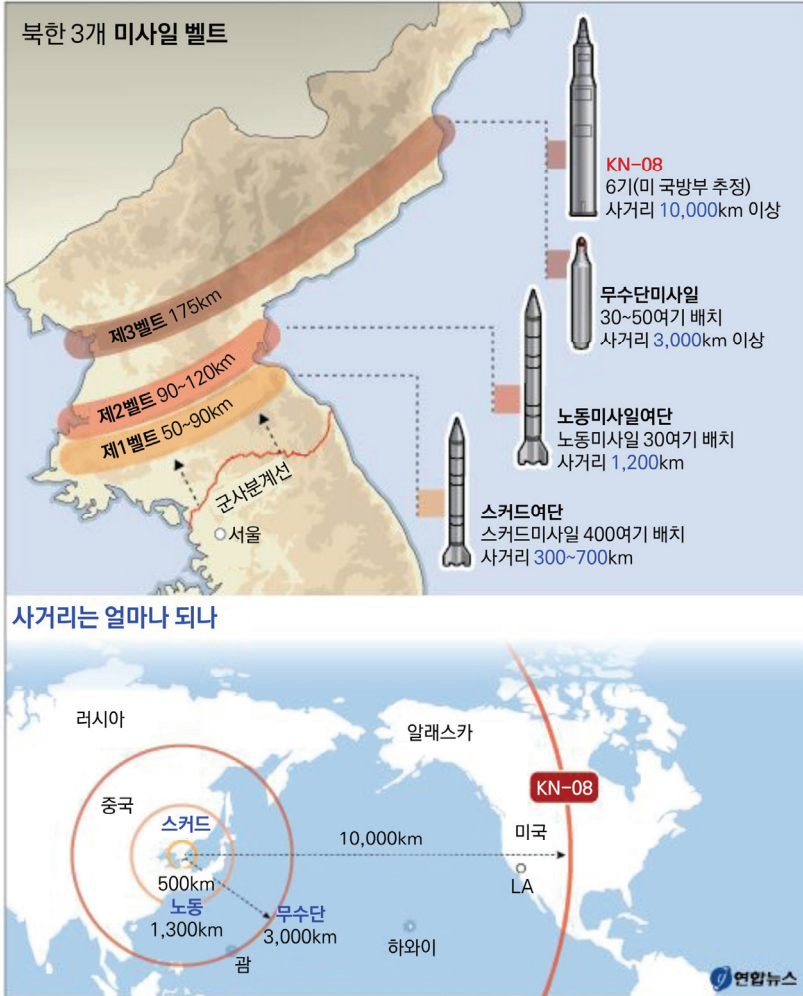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김정은 정권은 다종화된 탄도미사일의 고도화 성과를 고려해 미사일 실전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현재 아래 <그림 III-1>에서처럼 3개의 미사일 벨트를 북한 전역에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되는 KN-08 혹은 화성-14형의 실전배치가 가능해지면, 북한이 북한 전역에 구축하고자 하는 3개의 미사일 벨트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유사시에 전략적인 목적에 따라 전방과 중앙, 후방 지역에 각각 스커드 미사일 여단, 노동미사일 여단, 무수단 여단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83) 위의 책, p. 42.

그림 III-1 북한의 3개 미사일 벨트



자료: “〈그래픽〉 북한 3개 미사일 벨트,” 『연합뉴스』, 2016.02.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184099>> (검색일: 2017.05.03.).

사거리가 짧은 것은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인접 지역에, 사거리가 긴 것은 중앙지역과 후방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

다.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50~90km 떨어진 지역에 구축된 제1벨트는 스커드 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거리가 300~700km로 짧아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기 때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400여기가 배치되어 있고 스커드 미사일용 이동식 발사대(TEL)도 40대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다. DMZ 북방 90~120km에 구축된 제2벨트는 노동미사일 여단이 맡고 있다. 사거리 1,200km로 300기 이상 배치된 노동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를 볼 때 주일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다. 노동미사일의 TEL은 3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증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지역이다. DMZ에서 175km 북쪽인 이곳에는 30~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나 2017년에 집중 시연된 화성-12형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sup>84)</sup> 북한은 이들 중거리 미사일을 30대 안팎의 TEL을 활용해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다 ICBM급인 화성-14형, KN-08까지 제3벨트 지역에 배치되면 하와이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된다.<sup>85)</sup>

이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핵무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단계(2012년~2013년) 기간 중 법적·제도적 준비 및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핵 보유국’ 헌법 명문화(2012년 5월)와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 발표(2013년 4월)이다. 2단계(2013년~2014년)는 핵무기 고도화 시작 단계이며, 주요 내용은 HEU(고농축우라늄) 중심 핵물질 보유전략 전환과 단거리 미사일(SRBM) 성능 개선 집중이다. 3단계(2015년~2016년)는 핵

<sup>84)</sup>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2016년 실험성고가 만족치 못했기 때문에, 단기간 실전배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2017년 실전능력이 입증된 화성-12형이 집중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sup>85)</sup> “北, 이동식 ICBM ‘KN-08’ 배치하면 3개 미사일벨트 완성,” 『문화일보』, 2016.02.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166451014.HTML?input=1179m>> (검색일: 2017.06.02.).

무기 고도화 질적 발전 단계이며, 주요 내용은 표준형 원자탄(핵분열탄) 기술력 확보(핵기술력 1세대), 2세대 수소탄(핵융합기술) 기초 기술력 확보, 준거리 미사일(MRBM) 실전능력 확보 등이다. 4단계(2017년~2018년)는 핵무기 고도화 완성 단계이며, 주요내용은 수소탄(증폭핵분열탄) 기술력 확보(핵기술력 2세대)와 중·장거리 미사일(IRBM·ICBM) 실전능력 확보 및 미사일 다종화 구축이다. 마지막 5단계(2019년~미정)는 핵무력 구축 완성 단계이며, 주요 추진 과업은 핵무기 생산 체계 구축 및 대량 생산 개시 그리고 핵무기 실전배치 완료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4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구축 단계

1단계 : 2012년~2013년	<p>제도적 준비 및 핵무력 구축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 보유국’ 헌법 명문화(2012년 5월)</li> <li>-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 발표(2013년 4월)</li> </ul>
2단계 : 2013년~2014년	<p>핵무기 고도화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U(고농축우라늄) 중심 핵물질 보유전략 전환</li> <li>- 단거리 미사일(SRBM) 성능 개선 집중</li> </ul>
3단계 : 2015년~2016년	<p>핵무기 고도화 질적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형 원자탄(핵분열탄) 기술력 확보(핵기술력 1세대)</li> <li>- 2세대 수소탄(핵융합기술) 기초 기술력 확보</li> <li>- 준거리 미사일(MRBM) 실전능력 확보</li> </ul>
4단계 : 2017년~2018년	<p>핵무기 고도화 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탄(증폭핵분열탄) 기술력 확보(핵기술력 2세대)</li> <li>- 중·장거리 미사일(IRBM·ICBM) 실전능력 확보 및 미사일 다종화 체계 구축(SLBM 포함)</li> </ul>
5단계 : 2019년~미정	<p>핵무력 구축 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미사일 생산 체계 구축 및 대량 생산 개시</li> <li>- 핵·미사일 실전배치 완료</li> <li>- 핵추진 잠수함 및 전술핵 개발(미정)</li> </ul>

자료: 저자 작성



## 2. 핵전략 특징

김정은 정권이 이상과 같이 핵 독트린을 천명하였지만, 실제 북한이 그들이 밝힌 것처럼 핵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핵 독트린을 좀 더 보편적인 시각에서 구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핵전략 연구는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탈냉전과 더불어 연구범위가 확장되었다. 즉 냉전기에 비해 비핵국가의 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핵확산과 그리고 비국가행위자들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핵안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최근 개별 중소 핵 보유국가들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중소 핵국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구가 중심이었다. 또한 이 국가들의 핵전략과 핵교리에 대한 사례 연구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북한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연구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MIT 대학의 비핀 나랑(Vipin Narang) 교수 등이 지역 중소 핵 보유국가들의 핵전략을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다. 이들 연구 중 일부는 북한과 이란 등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핵 보유국가들의 핵전략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랑 교수의 핵전략 태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 핵국가들의 핵태세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전략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나랑 교수는 지역 중소 지역 핵 보유국들의 핵전략을 촉매형(catalytic posture), 확증보복형(assured retaliation), 비대칭확전형(asymmetric escalation)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sup>86)</sup>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핵태세를 구분하는 변수로 후원 강대국의 존재,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국가의 존재, 적극형과 위임형의 민·군관계 여부, 자원의

---

86) 정성윤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54.

제약 여부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87)</sup> 본 연구는 북한의 핵태세와 전략의 분석 시 나랑 교수의 연구결과를 원용할 것이다.

축매형 핵태세는 중소국의 핵 개발 동기를 주변 제3국의 군사적 외교적 관여를 촉진하는 것이라 파악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up>88)</sup> 즉 지역의 특정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강압을 통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안정과 특수한 전략적 이해를 중시하겠다는 주변 특정 강대국의 후원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한다. 즉 축매형 핵태세는 지역 중소 핵국가의 핵무기 개발 동기로, 핵무기의 군사적 효용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과 이익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sup>89)</sup> 즉 지역 국가의 초보적인 핵무기 개발 시도가 역내 균형과 같은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축매형 핵태세의 특징을 보이는 국가들의 경우 지나친 핵능력 보유보다는 핵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강화하는 것에 노력한다.<sup>90)</sup> 이 경우 지나친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안보전략에 핵무기의 활용이나 핵능력의 무제한적 추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최소역지나 최대역지를 추구하는 국가들처럼 2차 핵공격능력에 집착하지 않으며, 전술핵무기 보유에 대한 필요성 또한 크지 않다.<sup>91)</sup> 이러한 다소 신중한

87) 위의 책, p. 54.

88) 남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목적으로 핵 모호성을 유지했었다. 나랑교수는 1966년부터 1990년 사이의 이스라엘과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의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축매형 핵태세를 견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축매형 핵태세가 냉전기간 동안 가능했던 이유는 지역국들이 핵확산에 대한 위협을 통해 미소와 같은 강대국들의 행동을 견인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랑 교수는 축매형 사례가 냉전시기에만 발견되는 것은 아닐 거라 전제한다. 왜냐하면 축매형 핵태세는 기본적으로 제3국인 강대국이 인지하는 신뢰성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pp. 75~77.

89)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55.

90) 위의 책, p. 54.

91)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적대국에 대한 억지 신호(deterrent signals)보다는 후원 관계의 제3국을 향한 호소나 공갈이 강조된다.

핵태세를 추진하면서 국제 제재나 잠재적 적국으로부터의 선제 혹은 예방공격으로부터 초래되는 비용 부담을 우회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 핵 보유국가는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에 집중한다.

‘확증보복형’ 핵태세를 추구하는 국가는 촉매형과는 달리 핵무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량보복 등의 위협을 통해 적대국의 핵공격과 핵강압을 직접적으로 억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핵태세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촉매형을 견지하는 국가들과는 달리 역내에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후원국이 부재한 경우이다. 아울러 가상 적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않은 경우,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확증보복형 핵태세를 채택하기도 한다.<sup>92)</sup> 이 경우 핵무기를 적대국에 대한 확실한 대량보복용만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핵태세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확증보복형 핵태세를 지향하는 국가는 확실한 핵 대량보복 능력을 통해 적대국의 전략적 거점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목표로 하는 2차 공격능력의 구축에 노력한다.<sup>93)</sup> 그리고 2차 공격력의 확보를 위해 적국의 선제공격에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능력과 준비태세 또한 강조한다.<sup>94)</sup> 이러한 목적을 위해 촉매형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핵전력 투명성을 추구하지만, 적국의 예방적·선제적 공격으로부터의 핵무기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 배치 패턴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모호성을 지향한다.<sup>95)</sup> 또한 권력 지도부가 군부로부터 핵무기의

92)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56.

93) 위의 책, p. 56.

94) 핵무기의 절대적 수량 확보뿐 아니라 핵무기의 은닉이나 산개 배치, 전략 잠수함 능력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이러한 생존 능력을 통해 적대국에게 선제공격의 낮은 효용을 인지시키려한다.

95) 촉매형은 능력과 배치가 모두 모호해야 하지만 확증보복형의 경우에는 능력의 공개는 확실해야하나 배치와 관련해서는 모호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술하는 비대칭 확전형의 경우는 능력과 배치 모두가 확실해야만 한다.

관리 및 사용을 확실히 통제하는 독단적(assertive)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실제 전장에서는 재래식 공격에 대한 거부억지를 위해 핵무기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대가치 목표(counter value target)를 중심으로 징벌적 억지를 추구한다. 따라서 촉매형 태세와 마찬가지로 전술핵무기의 보유 및 배치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sup>96)</sup> 1964년 이후 중국과 1974년 이후 인도가 이러한 확증보복형 핵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비대칭확전’ 핵태세는 앞서 두 유형의 핵태세와 비교해 볼 때 가장 공세적인 핵태세이다.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의 인근에 믿을만한 후원국이 없는 상황은 확증보복형과 동일하다. 하지만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월등히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한 적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지역 소규모 핵국은 비대칭확전 태세를 갖추고자 한다고 나랑 교수는 지적한다. 이러한 태세를 지향하는 국가는 적대국의 조그만 재래식 공격(혹은 핵 선제공격)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핵 공격(혹은 보복)을 강행할 수 있다는 공세적 입장을 견지한다.<sup>97)</sup> 따라서 비대칭확전 태세는 다른 핵태세와 달리 신속한 핵무기 선제사용을 전제한다. 그리고 그러한 핵공격의 대상으로 대군사(counter force) 표적과 대가치 표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증보복형과는 달리 징벌적 억지의 속성을 당연히 포함한다.<sup>98)</sup>

<sup>96)</sup> 거부적 억지를 위한 전술핵무기 위주의 핵무기 배치는 궁극적으로 2차 핵공격력의 생존성을 낮춘다고 나랑 교수는 분석한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p. 77.

<sup>97)</sup> 나랑 교수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재래식 군사력의 억지를 위해 혹은 적대국의 재래식 군사 공격에 대응해 비대칭무기체계인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동원해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에서 비대칭확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대칭확전 태세도 외부의 제3국가에 대해 경고를 보내면서 촉매형 태세와 같은 효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촉매형 태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제3국가가 아닌 적대국에게 ‘직접적(directly)’인 핵무기 선제사용 위협을 ‘명확하게(explicitly)’ 보내는 점이다.

<sup>98)</sup> 정성윤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p. 56~57.

또한 비대칭확전 핵태세는 적대국의 우세한 재래식 군사 전력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평소 핵무기를 실제 전쟁에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확증보복형과 달리 위임형 지휘통제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아울러 그러한 위임을 받은 현장지휘관은 적대국의 우세한 재래식 능력에 대응해 핵무기 통제와 운용의 책임을 맡는다.<sup>99)</sup> 따라서 비대칭확전 핵태세는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핵무기의 과감한 선제사용을 전제로 억지의 목적으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포함하며, 표적과 관련해 대가치·대군사적 타겟을 구분하지 않고, 거부와 징벌적 억지 모두를 수용한다. 또한 대량보복 전략을 선택하거나 상황에 따라 유연반응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sup>100)</sup>

그러나 비대칭확전 핵태세를 견지하는 국가가 확증보복형과는 달리 다량의 핵무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적대국에 비해 압도적인 핵 우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핵무기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능력 보유보다는 핵무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실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상대방에게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01)</sup> 따라서 능력과 배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비대칭확전 핵태세를 추구하는 국가는 생존 가능한 2차 핵공격능력을 갖추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1960년 이후, 파키스탄은 1998년 이후 비대칭확전 태세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가 2차 핵공격능력을 조기에 구축한 데 반해 파키스탄의 경우 인도에 대해 2차 핵공격능력을 확실히 갖추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sup>102)</sup>

<sup>99)</sup>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p. 78.

<sup>100)</sup>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57.

<sup>101)</sup> 위의 책, p. 57.

<sup>102)</sup>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pp. 78~79.

### 3. 핵전략 메커니즘

#### 가. 강압의 정의 차원에서 북한의 안보전략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중심 안보전략은 강압전략의 전형이다. 강압의 의미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의 안보전략은 강압적 전략이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 위협과 핵무력을 수단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 의지, 결심,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통상 협의의 수준에서 강압전략은 군사적 강압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은 전임 김정일 시절과 달리 자신들의 핵무력과 군사적 도발을 통해 비핵화 타협을 거부해 왔다. 즉, 핵 중심의 군사적 효용으로 상대와의 영합적 게임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사안보적 강압의 전형이다. 넓은 의미에서 강압은 경제·정치외교적 압박을 포괄한다. 김정은 정권은 개성공단 협력 사업의 파탄을 초래함으로써 한국을 강압했다. 즉 개성공단이라는 경제협력 수단을 활용해 핵 보유라는 안보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중심의 공세적 안보전략으로 정치외교적 목적 또한 달성하려 하고 있다. 핵 보유국 지위 확보 주장이 대표적이다. 자신들이 핵무력을 달성하면 핵 지위국은 자연히 확보될 것이며, 이를 통해 체제와 정권의 생존 환경을 정치외교적으로 우세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다. 강압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은 강압전략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강압전략의 주요 구성요소인 강제(compellence)와 억지(deterrence)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강제전략 중 김정은 정권은 강압외교보다는 공갈(blackmail)에 경도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이 비위협적인 설득과 협상 등 긍정적 유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방어적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 5년 동안 북한은 위기 관리보다는 위기 고조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반면 최근 김

정은 정권이 공격적 의도를 숨기지 않고 공세적 위협을 가하나, 실제 극단의 군사적 행동까지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갈’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이 흔히 언급하는 서울 및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2017년 7월 광 인근을 포위하는 미사일 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정세 형성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점도 강제전략의 입장에서 설명 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중심 안보전략이 비단 강제와 공갈에 국한된 된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행태는 전술적 위협이나 행위 차원에서 자주 구사된다. 전략적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의 강압적 특징은 ‘억지’에 집중되어 있다. 즉 “핵무력 위협을 통해 미국 등 국가의 의지에 영향을 주어 정권 및 체제의 생존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미국이 압도적 핵 우위를 바탕으로 실제 군사적 행위를 강행한다면 쉽게 좌절된다. 이러한 취약성 차원에서 북한의 안보 전략은 억지적 속성을 당연히 내포한다. 아울러 고강도 도발을 지속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핵무력을 설사 완성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강압정책이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나아가 한미동맹이 파열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도 억지전략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나. 핵강압전략의 구성요소와 특징

김정은 정권의 안보적 차원에서의 억지전략의 주요 특징은 핵억지 대상, 핵억지태세, 대량보복 원칙, 선제사용 교리 등을 통해 구명할 수 있다.

### (1) 핵억지 대상

핵억지를 규정할 때 핵무기의 잠재적 투사 대상인 가상의 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핵억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 보유국가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위험적인 대상국이 누구인가의 문제이다.<sup>103)</sup> 북한은 아주 오랜 기간 일관되게 미국의 핵위협이 자신들의 핵 개발 동기임을 분명히 해 왔다.<sup>104)</sup> 북한의 인식과 주장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의 연장에서 북한이 미국만을 핵억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에 매진하고 있지만 미국과 대등한 핵억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핵억제는 기본적으로 취약하며 냉전기 미소와 유사한 핵균형을 구축하기는 요원할 것이다.<sup>105)</sup> 둘째, 북한의 대미 핵억제는 기본적으로 취약하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2차 타격능력을 완벽히 확보해 핵무기 생존력을 급격히 강화하지 못한다면, 비록 소수의 ICBM을 북한이 보유하더라도 북한의 대미 핵억지력은 구조적으로 취약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전력이 오로지 미국과의 핵억지력 확보 차원에서만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재래식 전력상의 심각한 격차에 따른 안보위협도 심각히 고려해 핵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해 한국이 첨단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작전계획을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위협 수준은 최근 상당히 증가되었을 것이 분명하다.<sup>106)</sup>

이러한 북미 간 혹은 남북 간 안보 현실을 감안해 김정은 정권은 현재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핵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ICBM 능력뿐 아니라 최근 남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아

103)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60.

104) Brad Roberts,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69~74.

105)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61.

106) 위의 책, p. 61.



올러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예이다.<sup>107)</sup> 앞서 분석했던 2013년 북한이 발표한 소위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어느 조항에도 미국만을 핵역지의 직접 대상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sup>108)</sup> 위 법령 5조에 의하면 “공화국은 적대적인 핵 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09)</sup> 이는 비핵국가인 한국이 핵 보유국인 미국과 연합해 북한과 재래식 교전을 벌인다면, 한국에게도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sup>110)</sup> 실제 북한은 2016년 3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실전 배비된 핵무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군사적 공격 수단들을…(중략)…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주요 타격 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기지들, 미국 본토를 정밀 조준하고 섬멸적인 발사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sup>111)</sup>

## (2) 핵역지 태세

북한은 어떤 핵태세를 견지하고 있을까? 혹은 현재 구축한 핵전력과 관련 없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태세를 지향하고 있을까? 과거 김정일 집권 시기의 북한의 핵태세는 촉매형에 가까웠다. 비록 북한의 부족한 핵능

107) 위의 책, p. 61.

108) 위의 책, p. 62.

109) 북한은 2016년 3월 16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에서 “국법에는 나라의 최고 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 그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들과 대상들을 핵타격 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타격 수단들을 총동원해 선제 소멸하게 규제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은 법령 5조의 해석에 한국에 대한 핵타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천만군민은 수령결사옹위성전에 총 쫓기하여 천하무도한 적들의 도발망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6.03.17.

110)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62.

111) “우리의 경고를 오판하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2016.03.09.

력으로 최소억지력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중국의 전략적·지정학적 이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관여를 견인했다. 그리고 국가 실패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정권의 안정성과 안보 구조의 외적 균형을 확보했다. 즉 김정일 시기에 북한은 대미 핵억지력을 완벽하게 확보하기에는 절대적 핵능력이 부족했지만, 핵 개발에 대한 강한 집착과 핵능력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sup>112)</sup> 특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제재에 직면할 때마다 중국의 후원으로 제재 감당 비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측면도 촉매형 핵태세의 전형적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북한의 핵태세는 가장 공세적인 유형인 ‘비대칭확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핵전력과 상관없이 ‘확증보복형’을 지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분석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이다. 첫째,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이 월등한 남한을 목표로 핵·미사일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비단 미국을 겨냥한 ICBM뿐 아니라 남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4차와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용이한 수소탄(증폭핵분열탄) 능력을 확보하려 한 것도, 수소탄 핵탄두를 ICBM뿐 아니라 SRBM, MRBM, IRBM 등에 탑재해 유사시 남한을 직접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집권 시기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남한과 일본 등에 대한 즉각적인 핵보복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격렬하게 한미연합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심각

<sup>112)</sup> 정성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분석(4): 국제관계와 안보,”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15, 2016.05.18.), pp. 3~4, <[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contId=1476768](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contId=1476768)> (검색일: 2017.04.08.).

한 군사적 도발이라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동맹의 재래식 공격 징후가 보이면 언제든지(북한의 표현 방식으로는 ‘임의의 순간’에) 핵무기를 동원한 선제타격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절대 남한 혹은 미국에 대한 핵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한미동맹의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13)</sup>

셋째, 통상 비대칭확전 태세를 지향하는 국가는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북한은 2016년 이후 노골적으로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자의적인 핵 선제공격이 가능함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핵무기 통제체제는 총사령관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독단적이고 배타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비록 비대칭확전 태세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위임형 지휘통제체제 구축을 추구하지만, 북한은 최근 자주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를 유달리 강조하며 즉각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는 독재국가의 특성상 외연적으로 핵무기는 김정은 개인이 직접 통제하고 있지만 그 배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위임형 지휘통제체제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향후 비대칭확전 태세를 엄격히 견지하리라 단언하기 어렵다. 지금은 핵무력 구축 단계에서 비대칭확전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확증보복 태세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대한 2차 타격에 기초한 확증보복 태세를 지향하고

<sup>113)</sup> 북한은 2016년 5월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아주 엄격히 해석하면 ‘실사적대국의 공격이 있더라도 재래식 무기만 사용한 비핵공격이라면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라고도 볼 수 있다. 문맥으로만 보면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핵선제 불사용 원칙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 국면에서 그들이 말하는 ‘책임 있는 핵 보유 지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반감을 완화시키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 북한의 핵 보유국법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상대의 핵 또는 비핵공격(재래식 공격)에 대한 핵보복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위의 글, p. 30 참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요 근거이다. 아울러 북한이 2016년 이후 SLBM 등을 활용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적극 돌파하려는 능력 또한 신장시키고 있는 점도 또 다른 판단의 근거이다. 또한 여전히 북한이 핵 선제타격 교리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는데, 이는 북한의 평소 위협적 언사들과 2016년 7차 당대회 등 공식적 발표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를 확보한 후 선제타격의 위협을 자제한다면 이는 확증보복태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대량보복 원칙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원칙은 제한보복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즉 상대 적국의 선제타격으로 인한 피해 이상으로 보복을 가하겠다는 군사적 대응개념이다. 통상 대량보복 전략은 적에게 보복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을 인지시켜 궁극적으로 적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받는다.<sup>114)</sup> 하지만 대량보복 전략의 효과적인 작동은 상대 적국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sup>115)</sup> 현재까지 북한이 공식적인 문헌과 법령 등을 통해 대량보복 전략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게 ‘무자비한 보복’ 등을 자주 언급하는 등 사실상 대량보복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선제 혹은 예방 타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써

<sup>114)</sup> 정성윤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68.

<sup>115)</sup> 대량보복 원칙은 그 속성상 보복에 관한 것이므로 2차 타격능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적대국의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충분한 핵능력의 보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충분한 핵능력의 구비 없이 선불리 천명한다면, 특히 위기발발의 초기 국면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상대국이 선제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 취약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아울러 대량보복 원칙의 채택은 핵 보유국이 징벌적 억지를 채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적 억지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신뢰성이 좌우되기도 한다. 거부적 억지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보복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상대국이 이를 사실상 징벌적 억지전략의 구사로 오인할 수 있다.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대량보복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세적 수사와 전략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실제 대량보복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sup>116)</sup>

우선 만약 한반도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남·북한 간 혹은 북미 간 군사적 위기 고조(escalation) 과정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즉 소규모 제한전이나 국지전 상황의 개전 초기에서 핵무기가 사용되기보다는 국지적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과정 혹은 직후에 북한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대량보복을 실제로 구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량보복 원칙을 천명하는 것에는 또 다른 전략적 딜레마가 있다. 즉 북한이 핵태세 교리로 비대칭확전을 선택하고, 궁극적인 군사적 목적은 유사시 한미연합전력의 승리를 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량보복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자칫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징벌적 억지를 추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sup>117)</sup> 이는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이 선제 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실제로 대량보복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유연반응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sup>118)</sup>

#### (4) 핵 선제사용 교리

핵 선제사용 교리(Nuclear First Use)는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국가 관계에서, 전면전 발발 이전에 어느 일방이 기습적으로 핵무기를 동원하여 선제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선제공격은 어느 일방이 전쟁 개시가 불가피하며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국의 전쟁 수행

116)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68.

117) 위의 책, p. 69.

118) 위의 책, p. 69.

능력을 약화시켜 전황을 유리하게 구축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이다.<sup>119)</sup> 김정은 정권이 만약 미국 혹은 한미연합군이 자신들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북한 지도부는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핵무기 선제사용 교리는 반드시 재래전 없이 핵무기를 우선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핵무기 보유국 간 전쟁 발발 시 상대방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 상대방보다 빨리 핵무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군사교리이기도 하다.<sup>120)</sup>

북한은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서 적대국의 공격에 대한 핵억제와 핵보복을 강조했다. 북한은 이 법령에서 핵 선제공격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령의 내용에는 없지만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강도 높게 역설하고 있다.<sup>121)</sup> 최근 북한의 공식적 주장에 따르면이라도, 북한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과 압살정책, 정전체제 붕괴로 인한 사실상 전쟁상태,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미국의 핵전쟁 도발 등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핵 선제공격의 명분이라고 주장한다.<sup>122)</sup> 즉 북한은 2013년의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서 선언적으로는 핵 선제공격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선언적 핵전략은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명분용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119) 위의 책, 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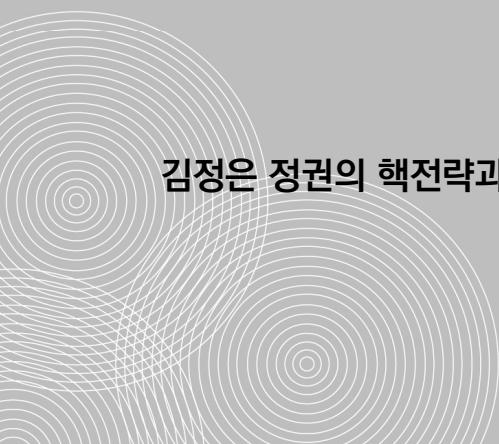
120) 즉 상대의 핵공격에 대응차원으로서 핵을 ‘대량보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원칙과는 배치된다. 이는 북한이 한미연합군과 제한전 혹은 국지적 무력충돌의 과정에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거나, 실제 전면전에 돌입했을 경우 전쟁 초기에 한미동맹의 전쟁 수행 능력 및 의지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공격옵션으로 핵 선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이든 미국보다 핵무기를 우선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121)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p. 70.

122) 위의 책, pp. 70~71.

# IV. 김정은 정권의 대외·대남 전략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 1. 전략 구상의 결정요인

김정은 정권의 핵강압전략은 구체적 정책 행위로 투사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앞서서 전략적 목표에 조응하는 전략 구상이 선행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을 조기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핵 지위국을 (비)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즉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이라는 강압 수단 체제와 정권의 생존 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사이에 작동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도전요소를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압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은 전략메커니즘을 구상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핵무력 강압 효과가 적절하게 발생 가능한 조건과 환경을 분석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 간 전략 행위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예상과 평가가 동반된다. 어느 국가든 이러한 전략메커니즘을 구상할 때는 우선 구조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주목한다. 하지만 변수를 식별하기에 앞서 전략메커니즘에 전제되는 상수(常數, constant)를 파악한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핵능력 중심 강압전략의 정책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략 구상 당시 전제되었던 변수와 상수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규명해야만 한다. 이는 결국 제재와 압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선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간주하고 있는 변수와 상수에 변화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맹신했던 핵강압전략 구상의 변수와 상수는 무엇일까? 우선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상수는 아래 <표 IV-1>과 같이 5가지이다. 아울러 이들 상수는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상호 연동되기도 한다.

표 IV-1 김정은 정권 핵강압전략 구상의 상수

- ① 시간은 내 편이며, 핵무력만 완성되면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받을 것이다.
- ② 미 본토 핵공격력만 갖추면 미국은 절대 우리에게 대한 핵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 ③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 ④ 남한이 당장 불필요하나, 상황이 악화되면 남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북조선 인민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김정은 수령 체제를 결사 옹위할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우선 북한은 현 정세가 자신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맹신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 목표 달성 시간표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따른 고통의 임계점을 비교해 볼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 이전에 핵무력은 완성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며 일단 핵무력이 완성되고 70~80기 내외의 핵무기가 실전배치된다면, 미국 또한 자신을 인도나 파키스탄과 유사한 전략적 지위를 가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처럼 북한은 원자탄(핵분열탄)을 이르면 2017년부터, 수소탄(증폭핵분열탄)은 이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키스탄과 같은 핵무기 수를 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5년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2018년에 선포할 가능성이 있지만,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핵무기량은 2020년 전후에는 보유 가능할 것이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와 압박의 수준이 어떠한 위 시점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맹신은 내부적으로 제재 결기를 강화하는 간접 효과도 발생시킨다.

둘째,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력만 완성하면,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강행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자신들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일종의

공갈(blackmail)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경험적·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68년 푸에블로호 사건과 74년 판문점 도끼 사건에서 확인했듯이 미국의 실제적 군사행동의 최고수위에 북한 본토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배제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울러 이미 90년대 초 1차 핵 위기 이후 확인된 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결단코 반대할 것이 자명하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무력 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하더라도 동맹국의 입장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미국의 직접적 공격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간주할 것이다. 이미 자신들이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탑재할 실전용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괌을 위협할 능력과 의지를 보일 경우 확전에 대한 두려움과 그 파급영향으로 인해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즉 한국, 일본, 괌을 핵 선제타격의 인질로 잡고 있는 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제한적이며, 북한 본토에 대한 군사적 직접 타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군사적 강압에 대해 북한이 그리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 결코 자신들을 방기(abandon)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유와 미국 변수로 인해 중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여전히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적 대북제재 레짐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있는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즉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맹신과 전제를 바탕으로 북한은 중국과 관련해 두 가지 기대 및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중국이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나 그 강도를 조절할 것이므로 단기간 고강도 제재와 압박은 힘들 것이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핵무력 완성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하면 결국 중국이 미국에 앞서 자신들의 핵능력 실체를 받아들이고 핵 보유국 지위의 확보에 큰 방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 기대한다.

넷째, 김정은 정권은 남한이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방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 국면에서 미국의 정책과 반대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등 적극적이고 단독적인 대북 강경대응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핵 게임에서 남한의 전략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남한은 항상 대화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한 순간에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카드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즉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군사회담과 같은 협상 카드는 자신들 입장에서 언제든지 큰 비용 없이 수용할 수 있고, 이러한 의제의 제안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남한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 국면에서 불필요하게 소중한 자원을 낭비해가며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남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상황은 대북제재와 압박이 너무 견고해 한미동맹을 균열시켜야 할 필요성이 아주 높아지거나,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 추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순간이다. 물론 강압전략 메커니즘의 정치적 권력기반의 잠식(power base erosion)이나 사회동요(unrest)처럼, 남한 내 갈등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 안정성 유지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그 어떤 외부적 강압이나 내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을 결사옹위할 것이라는 믿음

이 전략적 선택법에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제재저항능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자신감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자신감의 인지적 정향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신앙과 같이 축적되어온 지도자에 대한 굳은 신념 체계에서 비롯된다. 수령으로 상징화되는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는 미 제국주의자들에 저항해야만 하는 그들만의 '정의감'도 동시에 작동한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은 지도층 내부의 맹목적 단결뿐 아니라 엘리트 계층과 일반 주민 간의 균열 방지에도 기여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자 제재에 따른 국정운영의 부담과 주민들의 고통을 부단한 제재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고통을 내부 결속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rally around flag effect).

김정은 정권이 상기 5가지를 전략 구상의 상수로 파악한 가장 큰 배경은 '역사적' 교훈과 강대국 전략에 대한 자의적 해석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능력 보유 과정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 25년간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강행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과거에도 하지 못했던 군사행동을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 수준이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중국이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비호하는 이유인 미중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지속되는 한 자신들의 지정학적·안보적 가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이러한 요소들을 상수로 취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핵전력 구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 2. 대외전략과 북미관계

### 가. 대외관

통상 국가의 대외정책은 그 국가가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에 기초해 주요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출범은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유고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일 유고 이전에 김정은 개인이 어떤 대외 정세관을 견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며, 갑작스러운 정권 이양으로 인해 정권 초기에 특수한 대외관을 설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sup>123)</sup> 다만 김정은 정권은 출범 전후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의 전략 환경 변화를 유심히 관찰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초기 대외관을 정립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동북아의 정세 변화가 구조적 전환기에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즉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당시 상대적 국력의 쇠퇴를 상쇄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 관심을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세력균형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자신도 거대한 구조적 변혁에 연루되거나 희생국이 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 염려했을 것이다. 따라서 동맹에 대한 절대적 편승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강대국들의 수사적 약속(commitment)에 국가의 안위를 맡길 수 없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초기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대외관은 통치 2년차였던 2013년 신년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2012), 한반도 비핵화

<sup>123)</sup> 이는 2012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대외 부문 관련 별다른 특징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추론 가능하다.

(2011), 조미 적대관계 종식(2010), 한반도 평화체제(2010) 등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sup>124)</sup> 이러한 점에 유추해 볼 때 김정은 정권은 집권 1년 동안 거시적 대외 정세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고, 선대 김정일 정권이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강조를 삭제한 것에서 볼 때, 이미 2012년 중에 핵무력 완성을 통한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국가의 핵심 전략적 목표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세 달 뒤 소위 「핵 보유국 지위법」의 발표로 이어진다.

이후 확실히 정립된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은 2016년 5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결의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정세관이 100년 전 제국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현재 국제질서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지배와 예속의 구조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반동세력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행위를 짓 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를 ‘세계자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sup>125)</sup>

아울러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자 세계자주화 위협의 주 타격대상’이라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국제 대북제재 국면을 ‘유엔

<sup>124)</sup>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3년 북한 신년사 평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01, 2013.01.01.), p. 3. <[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contId=1453763](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contId=1453763)> (검색일: 2017.04.27.).

<sup>125)</sup> 정성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4): 국제관계와 안보,” pp. 1~2.

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 책동의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 등이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며 미국이 조도하는 '부정의'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퇴행적인 대외관과 적대적인 대미 인식은 그들의 생존전략 및 대외정책과도 직결된다. 김정은 정권은 반제국주의적 주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발전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세계자주화의 위업을 주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넘어서 이를 담보할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통해 '동방의 핵대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sup>126)</sup>

## 나. 대외전략 특징과 북미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은 핵무기와 북미관계가 근간이자 전부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핵무력을 완성해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는 대외환경과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극복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미국의 방해를 극복하는 것이며, 최종적 과업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전략을 전환시켜 미국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이 처한 외교안보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핵 지위국 확보가 이러한 전략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 맹신하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그 어떠한 흥정에도 교환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나 국제적 보장도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확실히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은 안보적 측면에서 '이중잠금 장치'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즉 핵무력 강화를 통한 핵 지위국 확보라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장치(crucial key)

<sup>126)</sup> 위의 글, p. 2.



와 북미 평화협정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정치외교적 부속·보조 장치(subsidiary key)를 통해 대외관계 및 정세를 확실히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가 없는 후자는 부족하며 전자를 획득하면 후자는 저절로 확보 될 가능성이 높은 보너스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평가는 2012년부터 김정은 정권이 선택한 대외적 행위와 주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첫째 2·29합의라는 미국과의 타협을 뒤집었다.<sup>127)</sup> 2·29합의 불과 두 달 후 광명성 3호 발사 실험이 그것이다. 이후 북미 간 비공개 접촉에서 북한은 2·29합의와 같은 타협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적대시 정책의 선(先)철회만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그해 12월 광명성 3호 발사를 재시도 했으며 이에 성공하였다. 이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2기 출범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희망을 접고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무시 전략을 채택한다. 특히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3월에 당 중앙위 전원 회의에서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공식 채택한 후,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이후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말을 두 번 사는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강경 비타협 태도로 대응한다. 대표적으로 한·미·일 3국은 2013년 6월 북한과의 대화재개 조건으로 2·29합의 이상의 조건(소위 2·29합의 + 알파)을 북측에 제시하기로 합의한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 재개 조건의 간극이 더욱 멀어진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 2기 정부 기간 내내 양국 관계는 소위 '북한의 억지 요구 대(對) 미국의 무시'로 비타협적 소강국면에 진입한다. 이 4년 동안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큰 방해없이 집중한다.

북미관계의 정세 변화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질적으로 전

<sup>127)</sup> 이는 미국과 북한이 2012년 2월 29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일시 중단, 그리고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상호 합의한 것을 김정은 정권이 고강도 도발을 통해 무력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환된다. 김정은 정권이 1월(시험용)수소탄 실험을 강행하고,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핵 탑재 탄도미사일 기술 능력을 공격적으로 시연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핵능력의 위협 수준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무관심했던 미국 본토 위협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에 미국은 3월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고 독자적 제재안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대북 전방위 제재, 즉 강압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정책전환 선택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은 9월 5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로 대응하며 소위 북미 간 ‘강 대 강’ 구도가 급속히 구조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제재-비핵화’ 프레임을, 북한은 ‘군축-북미 평화협정’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대화 재개 조건 및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간극이 더욱 벌어진 것이다.

북핵 문제와 북한의 대외정책 환경은 2017년 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더 큰 질적인 변환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미국 대선 캠페인에 변수가 등장했다. 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역주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국내 정치 변동성에 주목했을 것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략 도발을 자제한 것은, 미국 신정부 등장 이후 양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관련해 전략적 숙고에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등장 한 달도 되지 않아 북한은 도발을 재개한다. 오히려 2016년보다 더 높은 강도의 도발과 핵무기 고도화 기술적 진척을 공세적으로 과시했다. 즉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미 2016년 후반경 2017년의 전략적 과업과 목표를 설정했을 것이다. 그 핵심은 ‘비핵화 대화 거부 및 핵무력 조기 완성으로의 매진’이었을 것이다.<sup>128)</sup>

<sup>128)</sup> 북한의 이러한 판단은 2016년 정세 및 전략 평가의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총 20번의 고강도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도발에 따른 전략적 효용에 후한 평가를 했을 것이다.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국가 간 이견이 야기되었고, 대응 과정의 부정적 파급효과로써 사드(T

이러한 분석과 평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 및 사실에 따른 것이다. 우선 북한이 2016년 하반기 이후 세 차례나 주어진 미국과의 타협과 대화의 기회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기회는 앞서 언급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2월 초까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 소위 ‘햄버거 발언’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듯한 긍정적 메시지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개월간의 숙고 끝에 신정부 출범 직후인 2월 12일 북극성-2호인 중거리 미사일 실험 도발로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이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 캠페인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 직후 당선자 신분일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일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으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나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으로 대응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되기 직전인 2017년 3월,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기간 제안했던 소위 4NO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추가 고강도 도발로 스스로 타협과 대화의 계기를 걷어찬 부분이다. 틸러슨 장관이 밝힌 4NO는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북한 정권 붕괴, 통일 가속화, 미국이 38선을 넘지 않겠다는 일종의 체제보장 약속이었다. 이들 내용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심사에 대해 미국이 예전 정부와 달리 상당히 전향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4월에만 북극성-2호와 무수단 미사일 등 총 4번의 미사일 도발로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외면했다.

세 번째 기회는 미국이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을 최근 완화했지만 북한

---

HAAD)와 같은 국가 간 그리고 남한 내 새로운 갈등이 돌출되었음에 주목했을 것이다. 2017년에도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도발을 통한 전략적 지위 강화’라는 소위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 극대화에 주목하고 기대하였을 것이다. 정성윤, “북한 ICBM 급 미사일 실험의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p. 2.

이 또다시 도발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2017년 4월 10일,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포기가 북미 대화 재개 조건이라 밝히면서 기존의 엄격한 입장을 고수했다.<sup>129)</sup>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2017년 7월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ICBM급 화성-14형 실험 도발을 2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화 재개 조건을 낮추며 북한에 대한 ‘관여’를 가동했다. 미 국무부는 8월 16일 북미 대화를 위한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핵실험 중단,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 중단 등 3가지이다.<sup>130)</sup>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미국이 제시한 대화재개 조건 중 가장 문턱이 낮은 주장이었다. 즉 북한이 도발 유예만 선언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대화 재개 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북한이 애초 미국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기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비록 자신들의 요구 수위는 낮추었지만 북한이 그간 명시적으로 요구해 왔던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여전히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주장에 대해 큰 전략적 효용은 여전히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sup>131)</sup>

북한의 지속적인 대미 강압과 비타협적 태도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 기조를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설정했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자신들의 압도적 국력을 바탕

129) “美국무부 “北과의 대화재개 조건 불변…비핵화·WMD 포기 필요,” 『연합뉴스』, 2017.04.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1/0200000000AKR201704110306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4.11.). 이는 2017년 3월 킬러슨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130) “미 국무부, 핵·미사일 실험중단 등 대북 대화 3대 조건 제시,” 『연합뉴스』, 2017.08.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7/0200000000AKR20170817010700071.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8.17.).

131) 8월 16일 국무부 발표 당시, 미국은 “일부 국가에서 이중 동결(double freeze)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힘으로써,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재안인 소위 ‘쌍중단’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위의 뉴스.

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강제(compellence)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강압외교전략(coercive diplomacy strategy)의 전형이다.<sup>132)</sup>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강압외교 대상은 북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대북 강압 외에도 대중 강압을 동시에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 사안인 양국 간 무역 문제를 활용했다. 즉 미국이 경제적 손실과 중국의 정치외교적 저항을 감내하더라도 중국의 상대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해 중국의 대북 강압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강압전략메커니즘 중 2차 강압전략이다. 미국의 대중 강압 수단은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실행, 슈퍼 301조 적용 검토,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다.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은 양국 경제 구조 중 중국의 민감성과 취약성이 극히 높은 부분을 미국이 대중 강압의 압박점(pressure point)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강압적 정책 기초를 설정한 이유는 크게 5가지이다. 첫째,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수동적인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는 북한의 적극적인 행동과 의지 변화를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여를 조기에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안

<sup>132)</sup> 강압외교는 공갈(blackmail)처럼 강제전략(compellence strategy)의 대표적 유형이다. 강압외교는 이미 진행 중인 상대국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 ‘제한된’ 힘과 위협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방어적 혹은 공격적 목적과 상관없이 총체적 무력 사용(full-scale or brutal use of force)을 하는 일반 군사전략과 구분된다. 즉 강압외교에서의 강압의 의미는 적의 침략적 행위나 의도를 물리적인 힘으로만 좌절시키고자 하는 사전적 의미의 강압이 아니라, 가능하면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피하고 군사공격 등 실질적 무력 사용 이전에 상대국을 순응시키기 위해 가능하면 비군사적인 ‘설득적 방법’을 통한 해결에 비중을 두는 전략이다. Alexander George and William E. Simons, ed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pp. 7~8; 정성윤,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pp. 9~10.

보적 측면이다. 셋째,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며 중동과 유럽의 안보 정세가 예전에 비해 안정화됨에 따라, 미국이 북한 등 동북아에 전략적 관심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외교안보라인 주요정책결정자들이 대부분 대북 강압외교의 주창자들이며,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조야와 국민들의 전반적 분위기가 미국의 더욱 적극적인 대북 강압정책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3)</sup> 마지막으로 미국은 경제 및 외교 중심의 대북 강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관여를 유인해야 하는데, 중국의 지속적인 소극적 태도를 감안할 때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중국의 태도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압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역(逆)강압(counter-coercion)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의 대미 강압은 핵무기 고도화의 진전 단계와 연계되어 전개되었다. 2015년까지 북한이 시연했던 핵무기 고도화 수준은 미국의 본토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비록 핵물질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는 있었지만, 핵탄두 제조 기술력과 탄도미사일 발사체 기술력 및 실전화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이다.<sup>134)</sup> 하지만 북한이 2016년 이후 북한은 적극적인 기술력 과시와 잇단 도발로 이러한 핵무력 부족을 급속히 만회하고 있다. 특히 4차와 6차 핵실험으로 1년 8개월 만에 수소탄 제조 기술력을 확보했고, 2017년 전반기 동안 중거리 미사일 실전능력을 과시했으며, 7월에는 ICBM 능력도 상당부분 확보했음을 입증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능력은 서서히 미국 본토와 동아시아, 서태평양 인근의 미군 기지를

<sup>133)</sup> 미국의 조야뿐 아니라 미 국민들의 대북제재에 대한 요구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7월 13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40%가 북한을 최대위협국이라 답했다.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응답치보다 10%나 높았다. 북핵 시설에 대한 공습 지지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정성윤,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p. 4.

<sup>134)</sup>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마지막까지 고수했던 주요한 이유였다.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북한이 미 증원군 차단이라는 거부적 억지와 미 본토 타격이라는 징벌적 억지력이 단기간 크게 배양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러한 자신의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거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대미 강경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까지 간헐적으로 개최된 1.5트랙 차원의 북미 간 비공개 협상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핵·미사일 실험 유예’ 카드에 적잖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는 중국의 북미 대화 입구 중재안인 ‘쌍중단’과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의 대미 요구 수준은 한층 높아졌다. 북한은 2017년 4월 이후 일관되게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의 우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대북제재 철회, 한미연합훈련 중단, (북미 상호 군축을 통한) 평화협정 요구이다. 이는 미국만이 결정할 수 없는 내용과 미국이 들어 줄 필요가 없는 내용이 포함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 조건이다. 제재 철회는 이미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국제 레짐화되어 있으며 북미 간 군축은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이 절대 호응할 수 없는 내용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이러한 요구 조건을 높게 걸쳐 놓은 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안보 위협 수준을 높이며 미국의 의지·정책 기조의 일방적 변화만을 강제하고 있다. 지난 8월 판 인근의 포위 사격 위협이 대표적 강제 사례이며,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유엔 총회 기간 중 격한 언사를 한 점이나, 리수용 외상이 ‘선제공격’을 언급한 것 또한 강압전략의 대표적 유형인 공갈(blackmail) 행위이다.

향후 북미관계는 강 대 강 구도가 더욱 구조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상호 간 기존 요구 수준을 더 이상 낮출 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미 모두 상호 강압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실제로는 북한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점진적인 국가 실패화 속에서도 핵무기 고도화 완성

을 통한 핵무력 증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 고도화가 마무리되고 제재의 수준이 극에 달하는 시점에서 북미 간 관계 진전, 즉 대화나 타협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적 고도화 달성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간 동안 실전 검증된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이다. 북한이 동결을 통한 타협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는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 기술을 완료하고 상당한 양의 실전용 핵무기를 갖춘 그 이후가 될 것이다.<sup>135)</sup>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에 대한 주요 강압 메시지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자주 언급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공격용 무기의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36)</sup>

이처럼 2012년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의 전부는 바로 북미관계였다. 아울러 대외정책의 요체는 핵무력 중심의 강압전략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관된 노력이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보여 준 대외정책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첫째, 김정은 정권은 2·29합의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화나 타협 대신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애초에 대화나 타협에 큰 욕심이 없었거나 도발에 대한 명분 축적 차원에서 대화나 타협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둘째, 북한은 핵 중심의 공세적 안보전략을 통해 동북아 정세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자 했다.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했으며, 항상 도발을 통해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고, 미국의 정세

<sup>135)</sup> 정성운,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와 정세전망,” p. 6.

<sup>136)</sup> 현재 북미 간 핵능력으로 양국 간 ‘힘의 균형’을 달성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는 요원하다. 미국의 압도적 핵 우위(nuclear superiority) 및 국가능력을 어떠한 전략적 차원에서든 북한이 균형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언급하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은 미사일 방어 체제 및 기타 전략 자산 등을 총합한 구조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기간 공격용 핵무기를 대량 확보해 미국에 대한 대량보복의 2차 타격능력을 갖추겠다는 호기 혹은 협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장악력이 높아지면 더 높은 도발로 이에 저항했다. 셋째, 대외관계에서 중재국의 역할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와 달리 중국에 대한 비타협적·저항적 태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2016년부터 제안한 쌍궤병행안을 거부하고 있고, 국제 제재 레짐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이고 격한 반응을 삼가지 않는 점도 그 예이다.

### 3.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 가. 협력과 도발의 화전양면 전략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또한 대외정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공세적으로 일관되었다. 아울러 대남정책 또한 자신들의 핵무력 중심의 안보전략에 따라 전반적 기조를 연동하였다.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2년 북미 2·29합의 파기는 남북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 정권 초기의 대남정책의 특징은 북한이 ‘조국통일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2012년 8월 25일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개시 52주년 경축 연회 연설에서 김정은이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했다고 하였다.<sup>137)</sup> 이는 사실상 남북 간 전면전을 통한 무력통일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북한이 북미 관계와 마찬가지로 2·29합의 후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비타협·공세적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남한 정부가 적십자 회담 등 다양한 경로로 대화 재개를 추진했으나 북한은 모두 거부했다.

2013년에도 북한의 핵 중심 안보전략의 공세성은 남북관계에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북한의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인 3월 8일 유엔안전보

<sup>137)</sup> “김정은 UFG연습에 “전면적 반공격작전 서명” 위협,” 『연합뉴스』, 2012.08.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26/0200000000AKR20120826008100014.HTML> (검색일: 2017.05.02.).

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우발적 사건에 의한 전면전쟁 발발’ 가능성 등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3월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전략로켓군부대와 장거리 포병을 포함한 야전포병군 집단들에게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명령했다. 3월 30일에는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이 발표되어, 남북한이 전쟁 상황에 진입했으며, 이 기회를 조국통일대전의 최종 승리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30일에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한 이후 4월 3일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이 차단되었고, 4월 4일 북한은 근로자 철수를 위협했다. 4월 8일 근로자 철수와 사업 잠정 중단이 발표되었다. 4월 26일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취했다. 즉 자신들의 핵 도발로 인해 고조된 위기 국면에 남북관계를 연루시키며 남한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2014년은 전반적으로 남북 대화와 남북 간 대결국면이 상호 교차되었고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어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구체화한 시기였다. 장성택 등을 숙청하며 대내 권력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항구적 국가전략으로 경제·핵 병진노선에 입각한 대남정책을 본격화한 시기였다. 이 시기부터 북한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공세적 대남정책을 본격화 하는 데 핵위협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적극 모색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2014년 1년간 특유의 화전양면 전략을 대남관계에서 적극 구사했다. 2014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곧이어 1월 16일 국방위원회는 중대제안을 통해 상호 비방·중상 행위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핵재난 방지 조치 등을 전제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현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월에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기도 했다.<sup>138)</sup>

<sup>138)</sup>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4~2015』(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91~92.

하지만 북한은 3월부터 비방·중상 중단, 새로운 핵실험 위협, 인권 소동 중지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며 남한 정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2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총 102발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 기간 중 북한 국방위는 ‘특별제안’을 발표하고, 남한 측에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화해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또한 7월에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남한의 북침전쟁연습 전면중지, 6·15, 10·4 선언 등 남북 합의 존중·이행 등을 주장하며 공세적 대남 공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10월, 북한 고위급 3인방이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한을 방문하면서 남북한 간 긴장국면은 일시 해소되는 듯했다. 하지만 10월 7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며 남북한 간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지고, 10일에는 북한군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총격을 가하며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2015년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유화적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고위급 접촉 재개와 부분별 회담 시 최고위급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2015년 1월 9일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즉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립시 중지하는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 시험을 립시중지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밝히고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sup>139)</sup> 즉 현재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쌍중단 제안과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북한이 5월 새로운 탄도미사일인 SLBM 실험 발사를 하고, 8월에는 소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남북 간 급격한 군사위기 고조로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남북이 상호 간 확전을 지양하며 결국 8·25합의를 통해 위기를 상호 관리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한다. 이 합의에

139) “북한 “한미연합훈련 임시중지하면 핵실험 임시중단,” 『연합뉴스』, 2015.01.10.,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5/01/10/1801000000AKR20150110053951014.HTML>> (검색일: 2017.05.19.).

의해 10월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남북당국회담이 12월 11일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회담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남한이 이를 거부하자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전환한다.

## 나. 비타협적 대남 무시·강경 전략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정책은 2016년을 기점으로 질적으로 전환된다. 2016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연이은 고강도 도발로 인한 북한과 국제사회 간 강대강대결구도에 강력히 포섭되었다. 따라서 남북 양국 간 교류는 커녕 민간 교류와 협력도 전무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남한 정부의 각종 대화 제의를 무시하며, 오히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만을 상대하는 엄격한 남한 무시 및 배제 전략을 채택했다.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남한 보수정부, 즉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이다.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를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대북정책 기조도 준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8·25합의 전후의 남북관계이다. 북한은 목함지뢰 사건으로 촉발되었던 한반도 위기를 정리하며,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상호 군사문제 간 등가적 해결에 더해, 남측이 그간 강력히 요구해 왔던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북한으로서는 불필요한 양보일 수 있으나, 이는 향후 고위 당국회담을 통해 남측으로부터 더 큰 정치적 선물로 보상받고자 했던 계산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 박근혜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했던 ‘신뢰’에 기반한 대북정책에 대한 그들만의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측이 북핵 문제 및 대북제재와 연계해 이에 대한 의제화 자체를 반대하자, 더 이상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북한의 불만은 2016년 신년사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6·15선언, 10·4선언 뿐 아니라 8·25합의 존증을 강력히 촉구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2016년 이후 남한을 배제하고 강경한 정책을 투사한 것

에는 북핵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통한 전략적 지위 고양, 그리고 국가 생존 환경의 주체적 구축에 남한 정부의 도움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큰 방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즉 그들의 최우선적 국가 과업을 추진하고 완성하는 데 남한의 전략적 가치는 그리 높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핵무기 고도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 제재의 여파를 상쇄하거나 우회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남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국면에서 탈피해 북한의 요구와 필요에 응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큰 방해도 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대북제재와 압박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는 항상 이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울러 남한 보수 정권이 강조하는 ‘참수’, ‘폭정 종식’ 등의 격한 연사는 말 그대로 ‘말 폭탄’ 즉 공갈(blackmail)에 지나지 않으며, 능력은 없으면서 오로지 흡수통일 목적 하에 적개심만으로 자신들을 대한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인식하에 북한은 고강도 도발을 지속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을 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다. 북한의 대남 위협은 7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한 단계 진보했다. 3~4월경 북한은 ‘인민군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키고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 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sup>140)</sup> 특히 2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은 ‘선제적인 작전수행진입’을 최초로 공식 발표하는 성명이었다. 3월 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단지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순수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140) “북 김정은 ‘핵탄두 임의의 순간에 쏘 수 있게 준비해야,’” 『연합뉴스』, 2016.03.04.,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304002400038/?did=1825m>> (검색일:2017.05.01.).

에 머물지 않을 것” 그리고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 공격적인 방법으로 모두 전환하게 될 것”이라 했다.<sup>141)</sup>

김정은의 신년사 위주로 대남정책의 기조를 살펴볼 때도 북한의 이러한 공세적 대남 기조 변화는 두드러진다. 2015년 신년연설까지는 ‘남조선이 이러저러하게 잘못하고 있는데, 정책을 바꾸어 조국통일을 위해서 잘해보자’라는 것이 기조였다. 그러던 것이 2016년 신년연설의 핵심은 ‘통일대전 수행’을 포함하여 남측의 ‘동족 적대시 행동과 외세공조책동을 짓부시는 것’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6년 신년연설은 ‘적대세력의 도전은 계속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한바,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야 한다’라든가, ‘남조선은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는바, 외세 간섭을 배격하고 외세와의 공조책동에 반대 투쟁하자’라든가, ‘우리를 건드린다면 조국통일대전으로 답할 것이다’라는 식의 표현이 등장한다.<sup>142)</sup> 참고로 ‘조국통일대전’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집권 후 2013년부터 사용된 표현이다. 이후 이 표현 하에서 북한의 군비와 군사태세는 대남 전면전을 상정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다.

2016년 5월 개최된 7차 당대회의 대남 관련 연설은 2016년 신년연설에 나타난 이와 같은 대남 적대시 자세의 한 단계 고양을 반영했다. 총화 보고에 따르면 ‘북남관계가 견잡을 수 없는 험악한 지경으로 치달아 북남관계는 사상최악의 대결상태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남조선 당국이 동족 적대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수습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참혹한 재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북남군사당국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 되어 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

141) “北, 한미훈련에 “전쟁 터지면 책임 미국이 져야” 위협,” 『연합뉴스』, 2016.03.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6/0200000000AKR20160306056500014.HTML>> (검색일: 2017.06.05.).

142) “신년사,” 『로동신문』, 2016.01.01.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총화보고는 이와 같은 위협성 정세판단을 기초로 조국통일3대 현장을 실현하는 조선노동당의 투쟁방침으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화보고는 무력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총화보고는 통일에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도통일’이란 전쟁을 하자는 것인데, 남한이 이를 고집한다면, 북한은 정의의 통일대전을 통해 조국통일을 달성하겠다고 했다.<sup>143)</sup> 아울러 당대회의 결정서는 국방과학부문의 과업으로서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조국통일대전의 진군길을 열어제길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sup>144)</sup>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전례 없는 강경한 대남 기조는 2017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신년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았고 당시 남한의 탄핵 정국을 ‘보수당국에 대한 축적된 분노의 폭발’로 규정하며, 통일전선 차원의 남한 흔들기 선동을 강화할 것을 암시했다.<sup>145)</sup> 아울러 2016년에 이어 “미국과 추종세력의 핵위협 공갈이 계속되는 한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을 계속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비타협적 강경 정책이 오로지 보수 정권에 대한 불만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

143)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05.08.

144)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로동신문』, 2016.05.09.

145)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외의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01, 2017.01.01.), p. 1, <[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ontId=1477496](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CO&thisPage=1&ontId=1477496)> (검색일: 2017.05.06.).

김정은 정권은 남한의 새로운 진보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도발의 강도와 빈도만 비교할 경우 2016년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격한 대남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베를린 선언에서 전향적인 대북 관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의 군사회담 제안 등을 무시하며 기존 강경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베를린 선언을 통해 그간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 파탄의 주요 사항으로 강조해 왔던 흡수통일과 북한 붕괴에 대한 북한 측 우려를 고려한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를 평가절하하고 고강도 도발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거부했다. 한국 신정부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속내는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도발이 이전에 비해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북한은 4개월간 1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총 10차례의 전략 도발을 강행했다. 이는 전례 없이 도발 수위가 높았던 2016년의 총 25차례 핵·미사일 도발보다 훨씬 높은 빈도이다.

이는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내 탄핵정국 형성으로 진보 진영의 정권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 어떤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비타협 전략을 통해 핵무력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 노선을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즉 남한 신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평가하고 계획했던 대남정책 기조를 굳건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 정권이 사활을 걸고 달성하려는 핵무력 완성 과정에서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남정책의 지속 및 변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일지

문재인정부 출범(5월10일) 이후 북한 미사일 도발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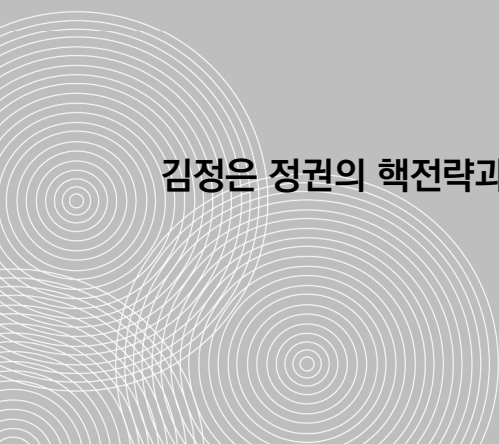
날짜	종류(추정)	이름	비행거리	발사지점	청와대 NSC	무력대응
5월 14일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 700km	평안북도 구성	상임위	
21일	MRBM (중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	→ 500km	평안남도 북창	상임위	
27일	지대공 신형 요격유도 미사일	번개-5형 (KN-06)		함경남도 선덕 (추정)	-	
29일	지대함 탄도미사일	스커드-ER	→ 450km	강원도 원산	상임위	
6월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 200km	강원도 원산	첫 전체회의	
7월 4일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4	→ 930km	평안북도 방현	전체회의	첫 한미 무력시위
28일	ICBM급	화성-14	→ 1000km	자강도 무평리	전체회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착수
8월 26일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B (추정)	→ 250km	강원도 깃대령	상임위	
29일	IRBM	화성-12	→ 2700km	평양시 순안	상임위	전투기, 폭탄(MK84) 투하훈련
9월 3일	<b>6차 핵실험</b>				전체회의	현무, 슬램ER 사격
15일	IRBM	화성-12	→ 3700km	평양시 순안	전체회의	도발과 동시에 현무 사격

자료: “[인포그래픽]문재인정부 북한 미사일 일지,” 2017.09.15., 『the300(머니투데이)』,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91516397628799&ref=http%3A%2F%2Fsearch.naver.com>> (검색일: 2017.10.01.).



# V. 결 론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 요체는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핵무력 완성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을 완성하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맹신하고 있다. 아울러 핵 보유국 지위를 갖추기만 하면 남북관계 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정세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생존과 국가의 안위는 과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과 상황에서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핵무기는 말 그대로 ‘절대 보검’이자 ‘만능 열쇠’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게 핵무기는 어떠한 다른 전략적 수단과도 대체될 수 없으며, 핵무력만 갖추면 비단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적 편익도 동시에 확보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점이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구축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게 비핵화는 핵무장보다 상대적 편익이 낮아서 관심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소중한 편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이상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는 요원할 것이다. 설사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비자발적으로 대화를 수용하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 타협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 정권이 오로지 핵무력 확보만이 ‘주체적’이며 ‘유일한’ 안보 수단이라는 판단을 단념하지 않는다면, 설사 미국과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타협을 지연하며 핵무장을 지속하려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여러 이유로 미국과의 타협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핵무장 재개에 대한 유혹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또한 자신들의 제안과 의도대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한의 핵전력이 완전히 폐기되는 순간까지 북한의 기만(cheating)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미 행정부보다 훨씬 엄격하게 북한의 말과 행동을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조그만 성의에 큰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 중 어느 쪽도 획기적 전환이 없다면, 비록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거나 혹은 잠정적 타협이 있더라도 북핵 문제는 과거와 같이 다시 불복과 대결의 장으로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미관계가 북핵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전략과 행위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에게 북핵 문제는 사활적인 안보 문제이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핵과 북한 문제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이해가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특히 2016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레버리지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회를 밝힌 바처럼 한국이 북핵 국면을 주도할 구조도 아니며 그럴 능력도 부족하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현재와 같이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도 난망할 것이다. 중국 또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간접 강압전략에 순응하며 미국과의 직접적 마찰을 자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을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과 협조해 자신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판단하는 상황 또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과거와 같은 레버리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자신들이 처한 딜레마를 획기적으로 극복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상당기간 북핵 국면은 미국과 북한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엄중하고 냉엄한 북핵 정세에 직면해, 한국이 우선적으로 유념해야만 하는 전략적 사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했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 강화는 최우선적 사항이나, 면밀한 위협 수준 평가 등을

고려해 과소 및 과잉 대응에 나서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는 반드시 요구되며, PAC-3 대폭 증강, 지상 기반 SM-3 조기 도입, 현무계열 미사일의 탄두 폭발력 강화,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전력 구축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강행 시 이에 대한 억지력 과시 차원의 군사 훈련은 그 효용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무력시위에 북한 지도부가 느끼는 심리적 공포감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크므로, 한미연합군의 실제 군사적 행동 강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북한이 감당 못할 징벌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북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과소평가도 문제이지만 과잉 대응이나 불분명한 대응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가령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 자체 건조, 독자 핵무장 및 전술핵 배치에는 좀 더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모두 실질적 억지 효과, 미중·한미·한중 갈등 가능성, 한국 내 참여한 의견 대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THAAD)문제를 반면 교사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현안에 대한 효용성 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전략적 종합 평가에 따라 전략 무기 자산의 도입 및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무기 도입의 전략적 필요성·기대 효과·전력화 가능성·정치 외교적 역효과 및 부작용·대안 유무 등 총 5가지 요소에 따라 신중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독자적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아주 시급한 사안이 아니고 그 파장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술핵무기 도입 관련 논쟁 자체는 더 높은 수준의 미국 확장억지력 제공 및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견인 측면에서 군사안보적·정치외교적 일부 효용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의 주요 목적이 군사안보적 차원이므로 이에 대한 내밀한 분석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전술핵무기 반입이 북핵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평가를 해야만 한다. 이는 결국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술핵무기 도입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북한의 전쟁 개시 유혹을 더욱 강화시키는지의 문제이다.<sup>146)</sup> 특히 전술핵무기 도입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부작용은 없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도 요구된다.<sup>147)</sup> 아울러 미래에 남북한 간 상호 군축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만 한다. 전술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를 대상으로 상호 군축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74년 이후 미소 간 군축 협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군축은 공격용 핵무기 자체의 상호 감축 및 폐기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의 적절한 균형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군축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북한은 전술핵무기 철수 이외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전면 해체,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요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148)</sup> 또한 전술핵무기 반입이 초래할 동북아 비핵화 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형식이든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반입된다면 일본도 핵무기 반입을 주장할 가능성

146)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핵공유 체제 도입 시 억지력 배가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북한에 선제공격 불사용 혹은 핵보복을 천명하고 북한 지도부에게 이를 강력히 주시시켜야 한다. 즉 억지의 신뢰(credibility)와 의지 전달(communication)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진보 어떤 정부도 이러한 핵전략을 채택할 의지가 있을지 불확실하다. 아울러 전략핵무기와 달리 거부적 목적에서 전술핵무기의 신속한 사용이 목적이라면 이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고려 대상이다.

147)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도입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억지력을 보강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막대한 자원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방어시스템 구축은 포기하고 공격용 핵무기 수를 최대한 증강시키며 대항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및 한국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것이며,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군비경쟁이 북한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게 유도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고,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148) 이 경우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정치·안보적 양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포의 핵균형을 이루고도 20년째 핵군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높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 전략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sup>149)</sup>

셋째,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별개로 대화 국면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의 추가 도발과 이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악순환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재의 목표를 단기적으로는 비핵화 대화 재개에 둘 수밖에 없으나, 북한의 제재 결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제재와 압박의 지속을 통한 북한 내부 균열도 동시에 겨냥하는 제재메커니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제재 수준을 격상시키고 이를 장기간 투사하는 것이 궁극적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결국 제재의 성패는 제재의 내용과 강도, 제재의 투사 기간 외에도 제재의 전략적메커니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재에 대응하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한국이 적극 개입해야만 한다. 아울러 전략 구상은 앞서 분석했던 북한의 전략 구상에서 '상수(常數)'로 설정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가지 맹신 및 기대를 좌절시키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무기 고도화와 상관없이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핵화를 위한 미중의 전략적 결단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야 하며, 우리 정부가 대화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다는 점과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북한 내 엘리트 통제 시스템 균열 등 반체제

---

<sup>149)</sup> 북한의 핵전략에 증원전력의 차단을 위한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직접 타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추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및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준거리 미사일(MRBM)의 보유 필요성이 높다. 미일동맹의 결속력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 전술핵무기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미국이 한일에 동시에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은 극단적으로 반발할 것이다. 동북아의 전략 핵균형의 붕괴가 주한미군 사드 반입으로 시작되어 한일의 전술핵무기 동시 반입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며 역내 핵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동북아 신냉전 체제의 도래를 의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조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집이 증폭될 수도 있음을 각인시키는 방향의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스마트 제재가 실행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거나 자원 배분을 재조정하면서 제재 효과를 상쇄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민생과 인도적 문제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포괄적 제재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만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동수 외. 『2013년 북한 핵 프로그램 및 능력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신중호 외.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정성윤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4~2015』. 서울: 통일연구원, 2014.

Art, Robert J. and Partick M. Cronin. eds.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3.

Byman, Daniel L. and Matthew C.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Cimbala, Stephen J. *Coercive Military Strategy*. Texas Commerce: Texas A&M University Press, 1998.

George, Alexander L.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1.

George, Alexander and William E. Simons. ed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George, Alexander L., David K. Hall and William E. Simon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Laos, Cuba, Vietnam*. Boston: Little, Brown, 1971.

Pape, Robert A. *Bombing to Wi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Roberts, Brad.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6.

\_\_\_\_\_.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2. 논문

부승찬. “약소국 북한의 생존전략: 원칙과 구현방식.” 『국방연구』. 제60권 제2호, 2017.

이동선. “국제사회의 파급영향.” 정성운 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_\_\_\_\_. “북한에 대한 강압: 효과와 전략.” 『전략연구』. 제19권 제2호, 2012.

정성운.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2호, 2014.

\_\_\_\_\_. “미국의 대북 무력강압 실패에 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2호, 2014.

\_\_\_\_\_. “북한 화전양면 전략의 특징과 전망.” 『전략연구』. 제19권 제1호, 2012.

Art, Robert J. “The Fungibility of Force.” In *The Use of Force: Military Power and International Politics*. 6th edition. edited by Robert J. Art and Kenneth N. Waltz.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4.

Freedman, Lawrence. “Strategic Coercion.” In *Strategic Coercion: Concepts and Cases*. edited by Lawrence Freedman. Oxford: Oxford University, 2003.

Jakobsen, Peter V. “Coercive Diplomacy.” In *Contemporary Security Studies*. 2nd edition. edited by Alan Colli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Narang, Vipin.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1. Spring 2015.

Pape, Robert A. “The Limits of Precision-Guided Air Power.”

### 3. 기타 자료

『로동신문』.

『문화일보』.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the300(머니투데이)』.

정성윤. “북한 ICBM급 미사일 실험의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20, 2017.07.20.

\_\_\_\_\_.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와 정세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26, 2017.09.11.

\_\_\_\_\_. “북한의 IRBM 시험 발사 평가와 북미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06, 2017.02.24.

\_\_\_\_\_.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분석(4): 국제관계와 안보.”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15, 2016.05.18.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3년 북한 신년사 평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01, 2013.01.01.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01, 2017.01.01.

정성윤. “북핵 정세의 특징과 우리의 대응전략.” 제2차 KINU 평화포럼 기초  
발제문, 2017.08.07.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 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 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 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 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욱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욱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욱 외	24,500원

## 연구보고서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 2017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안과 계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한	7,5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한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 · 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 연례정보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2 (2017)</i>	10,000원

## 기 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김정은 정권 5년 통치전략과 정책 실태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통일연구원

